

정당별 정책 공약 분석

< 제목차례 >

I 경제/민생	3
[이슈 I-1]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	3
[이슈 I-2] 일자리 창출	15
II 정치/행정	20
[이슈 II-1] 국회선진화법	20
[이슈 II-2] 국회의원 기득권 개혁방안	35
III 외교/안보	48
[이슈 III-1] 대미·대중 외교	48
[이슈 III-2] 북핵문제/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63
IV 교육/환경	48
[이슈 IV-1] 교육분야 정당별 정책	48
[이슈 IV-2]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사용	63
V 사회/복지	95
[이슈 V-1] 저출산 대책	95
[이슈 V-2] 고령화 대책	107

2016. 03. 28.

한국정책학회

I 경제/민생

[이슈 I-1] 중산·서민층 주거안정대책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 확대

-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60억 원의 예산을 지자체에 지원
 -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1:2로 매칭
- 젊은층 및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 2017년까지 젊은층을 위한 행복주택 14만호 공급
 - 2017년까지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 최대 10개 조성
- 공공실버주택 공급
 - 2020년까지 매년 800호의 공공실버주택 공급
 - 주택건설비는 기존 영구임대예산 범위에서 추진하고, 시설개선비와 운영비 추가 지원(약 2천억 원)

□ 대학연합기숙사 확충

- 공공기금, 민간기부금, 국고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해 건립비 확보
- 2020년까지 3,200억 원 소요(기숙사 1개소당 800억 원, 총 8개)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주거안정대책 추진

- 경제구조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토대 마련
-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내수경제 활성화 기여
- 시장의 자율성, 민간의 자발적 참여, 현행 제도의 유지 등에서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입장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
 - 뉴스테이와 행복주택을 성공적인 주거안정대책으로 인식
 - 주택시장의 활성화, 시장의 자율에 의한 주택 공급물량 조절,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민간기부금 활용 등을 주장
-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시장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입장
 - 재원조달방안에 있어서도 국가의 예산지원을 최소화하는 방안 모색
 - 지자체 매칭, 민간기부금, 기존 예산 활용 등

□ 정책공약의 목표

-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한 목표 수치는 제시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을 반복하는 수준
- 현재 중산·서민층의 주거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설명이 부족하며, 특별히 심각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인식하는 입장
- 향후 주택가격 변화에 대해서도 매우 추상적으로 낙관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으며,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

□ 정책공약의 수단

-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한 추진방안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설명은 부족
 - 행복주택, 뉴스테이, 공공실버주택, 대학연합기숙사 등을 추진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한 실정
-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은 제시하고 있지만,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부족
- 현행 제도의 틀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방안들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 추진에 있어서 법적·제도적 제약은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
- 이미 계획되어 있는 사업들에 대한 시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수준

□ 정책공약의 효과

- 많은 국민들이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현재의 제도를 소폭 확대하는 수준에서 주거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존재
- 소득계층별·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계를 구축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 볼 때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공공주택 공급

- 매년 15만호 이상 공급하여 2017년 재고량 200만호, 10% 목표 달성
- 청년용 셰어하우스 임대주택을 5만호 수준 공급하여 대학생, 청년의 주거난 개선
 - 단신용, 청년용 셰어하우스, SOHO 창업주거, 신혼부부용, 여성전용, 고령자 맞춤형, 장애인용 등 다양한 수요자에 맞는 공공임대 제공으로 세입자선택권 강화, 주거만족도 향상
 - 대학밀집지역에 주거와 R&D, 일자리/창업이 연계된 SOHO형 주거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건설하여 대학생 주거난과 취업난 개선
- 세제지원 확대, 임대등록제 도입, 리모델링비용 지원 등으로 준공공임대 정착 및 임대제고량 확대
- 에너지플러스 하우스를 공공임대에 우선 적용하여 취약계층의 에너지 빈곤 문제 해결

□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주거빈곤층 : 응급주거 제공, 맞춤형 주거상담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발, 주거 기본법 제정에 따른 자치단체별 주거개선 프로그램 적극 지원
- 최저주거수준미달가구 : 대상가구 전체로 주거급여확대 및 급여요율 단계별 현실화

정부(주거급여)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국민의당
82만가구 월 11만원	128만가구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11만원→20만원 단계적 인상	169만→334만가구 20만원	-
1조원	1.7조~3조원	4조~8조원	

□ 공공임대 공공성 강화

- 임대등록제
 - 임대주택법 개정안(이미경 의원)은 3호 이상 주택보유자로 1호 이상 임대 시

등록 의무화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세입자가 요구하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임대기간을 2+2년, 혹은 3년+3년으로 보장하자는 취지
- 전월세 상한제
 - 계약연장 시 5% 상한, 과도한 임대료 상승 방지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기본적으로 국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추구
 - 주거 관련 독과점 해소 및 자원의 최적분배 추구
-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투명성의 측면 강조
 - 전월세 비용 상승, 주택가격 양극화 등의 해소 주장
 - 주택가격의 거품현상 지적,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임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

□ 정책공약의 목표

- 주거안정대책의 대상집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목표 제시
 - 주거빈곤층에 대한 추정치(주거빈곤층 53만 명, 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128만, 무주택 가구 850만, 하우스푸어가구 250만 등)를 제시하고 있지만, 추정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부족
 - 정책대상에 대한 수치는 제시되어 있지만, 공약의 달성정도를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는 부족
- 현재 중산·서민층의 주거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 제시
-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제시
 - 객관적인 연구결과 등의 제시를 통해 주택가격 전망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격 하락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 강조

□ 정책공약의 수단

- 주거안정대책을 주택시장 선진화, 주거복지 확대, 공급량 확대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가장 시급한 공약으로 판단

- 공약 이행에 법률 개정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단기대책과 중기대책으로 구분하여 설명
 - 5개의 단기대책과 4개의 중기대책에 대한 설명 제시
 - 그러나 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 부족
- 단기대책

대책	내용	비고
① 세대분할	· 현행 '주택법시행령'(법무부)에서도 '세대분할' 허용, 당장 가능	국토부 검토중
② 매입임대	· (매각부진) 기존주택을 매입, 수리후 기초수급자/소득1-2분위에 임대	예산
③ 대학생/청년 주거대책	· 대학생전세임대 MB정부(12년) 1만호→박근혜정부 축소 · 행복주택, 국민임대, 준주택사업에 단신용 셰어하우스 공공 임대를 5만호 공급하되 당장 5천호정도 시범사업을 하자	예산
④ 준공공임대확대	· 현재 '녹색건축사업'으로만 리모델링비용 지원 · 준공공임대 리모델링비용 일부 지원 예산을 16년도에 반영필요	예산
⑤ 전월세전환율인하	·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전월세전환율인하(12.23 여야 합의사항) · 전월세전환율, 야당-기준금리+3%, 정부-기준금리+4% 큰이건 없어 ·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개정사항. 특위대안 마련상태	여야 합의

- 중기대책(법률 개정, 혹은 예산투입 후 기간소요)

대책	내용	비고
① 임대등록제	· 임대주택법개정안(당론입법, 이미경의원)은 3호이상 주택보유자로 1호이상 임대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임 850만 가구 주거불안정 방지 ☞ 임대시장 선진화 필요	임대주택법 개정
② 계약갱신 청구권	· 임대기간을 2+2년(당론), 혹은 3년+3년으로 보장하자는 취지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없는 임대료상한제는 무의미 · 부동산3법처리 당시 <12.23여야합의> 사항	임대차 보호법
③ 전월세상한제	· 계약연장시 5%상한(당론). 정부,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입장 · <12.23여야합의>에서 전월세전환율인하, 분쟁조정위 설치 합의	
④ 공공임대 공급확대	·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하여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확대한다(12.23여야합의) · 국제통용 장기공공임대 경우 2014년 98만호로 총주택량 1,943만호의 5.05% 수준	합의 사항

-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을 제시하고 있지만, 산출근거에 대

한 설명 부족

-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언급 부족
- 주거안정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입장 제시

□ 정책공약의 효과

-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해 부의 양극화, 개발이익의 사적귀속 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예산 확보, 법률 개정 등 실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 존재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주거급여 확대

- 부양의무자 제도 축소(최종적으로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주거급여 인상 추진

□ 공공임대주택 확충

- 국민의당 :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평균 달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추진

□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주장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주거복지의 실현 추구
- 자신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실천과제에 대한 설명 부족
 -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 필요

정책공약의 목표

- 주거안정대책의 대상집단과 관련한 목표는 매우 추상적인 수준
 -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목표로 제시
 - 공약의 달성정도를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 부족

정책공약의 수단

- 국민연금을 활용하여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수준의 설명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추진방안에 대한 설명 부재
- 주거안정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방안과 시간계획에 대한 설명 부재

정책공약의 효과

- 현재 발표된 내용만으로는 공약의 기대효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 공공주택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및 관련법 개정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공공택지 조성원가 공급, 공공주택사업 국민연·기금 참여 확대
 -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연간 15만호 이상 반값임대 공정주택 공급
 - 2016년 정부의 임대주택 계획 : 공공 11.5만호, 뉴스테이 2.5만호 등 14만호
 - 향후 연간 15만호 이상의 공정주택 공급을 통해 OECD 평균 수준인 12% 이상의 공공주택 확충
- 공공주택 공급대상의 확대
 -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주체를 비영리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확대

주거비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액 인상

- 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형 연계방식 폐지
 - 부양의무자 기준 및 생계급여 연계방식을 폐지하여 지원대상 확대
- 주거급여 인상
 - 주거급여를 월평균 11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주거급여법 개정)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 전월세상한제 시행
 - 임대차 계약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 5%로 규정하고 있는 임대료 상한률을 3.3% 이하로 제한
-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 세입자가 요구하면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
- 공정임대료 도입
 - 지방정부가 개별주택에 대한 공정임대료를 산정·고시하여 과도한 임대료 상승을 방지

전세보증보험 의무화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국가보조를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

2. 분석

정책공약의 가치

-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하여 형평성과 공정성 추구
 - 소득·계층 등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에게 주거권 보장
 - 주택시장의 소비자와 공급자 간 공정한 거래 보장
 - 주택이 자신증식 수단이 아닌 거주공간으로 인식되는 사회 지향
-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세부 실천과제에 정의당이 추구하는 가치들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으로 판단
 -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비소구대출 전면 확대, 주거비 지원대상 및 지원액 확대 등 공공부문의 개입을 통한 형평성 확립 추구
 - 주거안정대책은 시장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제문제가 아니며, 향후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중산층과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 정책공약의 목표

- 주거안정대책의 대상집단과 관련한 목표는 다소 추상적 수준
 - 청년, 독거노인, 저소득층 등의 주거불안해소와 무주택자를 위한 집값거품 제거를 목표로 제시
 - 공약의 달성정도를 계량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수치 부족
- 현재 중산·서민층의 주거문제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구체적 분석 제시
 - 규제완화 정책으로 인한 집값거품 현상, 미흡한 주거지원 정책으로 인한 주거불안 문제, 부동산 관련 세제의 과표 문제 등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문제점 지적
-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여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 제시

□ 정책공약의 수단

- 주거안정대책과 관련한 추진방안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 반값임대 공정주택, 주거급여 개선, 전월세상한제, 공영임대료, 세제지원 확대 등과 관련한 구체적 방안 제시
- 주거안정대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재원도 비교적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산정
 - 세부 실천과제에 소요되는 재원을 산출하는데 있어서 객관적 기준 제시
 - 국민연·기금 사업참여, 세제개편으로 인한 세수증가분 등 재원조달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국토연구원 보고서 인용)
- 주거안정대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 부족
 - 재원조달방안의 측면에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설명 부족

구분 (실거래가 반영비율)	2013년 기준 현행(65%)	정의당 제안 (80%)	증가
재산세	8조 1410억원	10조 982억원	1조 9,572억원
종부세	1조 2,243억원	3조 3,228억원	2조 985억원
부동산 보유세 합계	9조 3,653억원	4조 4,210억원	4조 557억원
관련세수 증가분(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5,014억원
부동산 보유세 관련 세수 전체 증가분			4조 5,571억원

- 주거안정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시간계획에 대한 논의 부재
 - ‘2020년까지 달성’이라는 추상적 계획 제시

□ 정책공약의 효과

-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과 공평과세 실현을 통한 사회적 양극화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 주택문제에 대한 적극적 정부 개입으로 인해 주택시장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 존재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기본적인 입장 차이

- 현행 제도에 대한 만족 vs. 불만족
 - 새누리당은 현행 추진되고 있는 뉴스테이와 행복주택 등이 잘 수행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택시장이 3% 내외에서 안정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인식
 - 더불어 민주당과 정의당은 현행 주거안정대책이 만족스러운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다고 인식. 예를 들어 정의당은 현재의 제도들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보다는 기득권 세력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특혜장치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주택가격 폭락에 대비하여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
- 시장에서의 자율 경쟁 vs. 정부의 적극적 개입
 - 새누리당은 시장에서의 공정 경쟁을 통해 개인이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주택시장의 활성화, 시장의 자율에 의한 주택 공급물량 조절, 뉴스테이와 같은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 민간기부금 활용 등)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거안정대책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분양가 자율화 등 규제완화 이후 주택가격 상승, 부동산 차별·다주택자의 불로소득 환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등). 다양한 근거자료를 통해 중산층과 서민층의 주거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
- 경제 문제 vs. 복지 문제
 - 새누리당은 주거안정대책을 경제적인 이슈로 파악하고 있으며, 시장의 자율적 선택에 맡겨두어야 한다는 입장(필요재원의 조달도 국가 예산지원은 최소화하는 방향)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거안정대책을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파악. 특히 정의당은 집값거품 제거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와 국민주

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복지 실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뉴스테이와 공공임대 리츠 등이 주거안정이 아닌 기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다고 인식(국민연금, 주택도시기금 등 공공재원의 투입 확대 주장)

○ 자율성 vs. 형평성

- 새누리당은 주거문제와 관련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주거안정대책의 주요 가치로 형평성, 투명성, 공정성 등을 제시

□ 주요 이슈에 대한 입장 차이

○ 주거급여 확대

- 새누리당 : 부양의무자 폐지 및 완화와 관련하여 신중한 태도(추가적 복지지출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검토 필요)
- 더불어민주당 : 주거급여 대상 확대(최저주거수준 미달가구), 급여요율 현실화 추진 → 구체적 추진방안 미흡
- 국민의당 : 부양의무자 제도 축소(최종적으로는 부양의무자 제도 폐지), 주거급여 인상 추진 → 구체적 추진방안 미흡
- 정의당 : 주거급여 지원 확대(부양의무자 기준과 생계급여 연계방식 폐지), 구체적인 소요재원 산출 및 부동산 관련 세제개편을 통한 세수증가분 활용 방안 제시

○ 공공임대주택 확충

- 새누리당 : 2020년까지 매년 60억 원 예산 지원,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1-2인 가구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 → 공공임대주택의 중요성에 비해 지원되는 예산액은 매우 부족한 수준으로 공공주택 재고율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존재
- 더불어민주당 : 공공임대 10% 공급 및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호 공급으로 청년주거 획기적 개선, 저가 중소형주택 공급확대
- 국민의당 : 2020년까지 공공임대주택 비율 OECD 평균 달성, 다양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국민연금을 활용한 청년희망임대주택 사업추진
- 정의당 : 매년 반값임대 공정주택 15만호 공급(뉴스테이 정책 전면 중단), 국민연금과 주택도시기금 활용 확대를 통한 재원확보

○ 세입자 보호제도 도입(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 새누리당 : 전월세가격 급등, 수익성 악화 및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임대주택 공급감소,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간 갈등 등에 대한 우려로 신중한 입장 표명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세입자 보호를 위해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 공정임대료 도입 주장 →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구체적인 내용 제시

○ 공약의 실현가능성

- 새누리당 : 현재 시행중인 제도를 바탕으로 소폭의 변화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약의 실현가능성은 높은 수준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 다수의 법률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며, 추가로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

[이슈 1-2] 일자리 창출

1. 각 정당 대표 공약

새누리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400만개 창출 (U-턴기업 및 콘텐츠 관광 등) - '청년 희망 아카데미'의 전국 확대로 윈스톱 지원 - 공공기관 근로시간 저축휴가제-단축근로제-시간선택형 근무제 확대 - 임금피크제 확산과 연계한 60세 정년제 안착
더불어민주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일자리 70만개 창출과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기업규모에 따라 민간대기업에 적용 - 청년 취업활동지원(금) 지원 - 패키지형 공공 고용서비스 제공
국민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청년고용할당제 및 민간부문 확대도입 - 후납형 청년구직수당 도입 - 기간제-파견근로자-용역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여 비정규직 사용 억제 - 기간제 교체 후 동일업무 6개월 채용 금지
정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고용할당제 상향 (5%) 및 대기업 확대 - 청년디딤돌 급여 (월50만원씩 최대 540만원) - 기간제 근로자 사용 1년 제한 -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 비정규직 사용제한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으로 일자리 정상화

2. 정당 간 특정 비교

- 새누리당과 야 3당 간에는 일자리창출 기제(mechanism)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 공약의 경우, 경제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경우에 민간부분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 효과에 집중하는 공약을 제시한 것이 특징. 즉, 경제가 활성화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 있음을 가정하고 경제활성화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야 3당의 경우 방법론과 강조점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보다 인위적, 직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전제로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공약에 초점이 맞추어짐. 그리고 이를 민간부분에도 확대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

- 서로 다른 두 가지 접근방식 중 어떤 방식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에 효과적일지는 전문가의 판단도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며, 결국 총선에서 유권자들의 판단이 중요하게 작용할 부분
 - 다만, 야 3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이 일자리의 양 뿐만 아니라 질(quality)의 향상 방안까지를 포괄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 새누리당과 야 3당 간에는 세대별 일자리 창출 목표에도 차이가 있는데, 새누리당은 중장년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를 구분하여 비교적 균형있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야 3당의 일자리 창출 공약은 주로 청년 세대를 주요 타겟으로 제시하고 있음
- 공약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4개 정당의 공약은 가치-정책목표-정책수단-정책효과 간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재원조달과 법제화 시간계획에서는 구체성이 다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관련해서, 새누리당의 일자리창출 공약은 경제활성화 정책이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야 3당의 일자리창출 공약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은 재원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공공부문의 정책선도효과가 민간부문에까지 연결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은 각각 미흡한 것으로 보임
- 기존 공약 혹은 정책과의 정합성과 관련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새로운 공약 제시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공약 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며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정당공약의 장단점 비교

새누리당

○ 장점

- 정책수단-정책목표-영향(impact) 간의 연계성 및 작동 기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제시
- 중장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일자리 창출의 방안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단점

- 순수한 일자리창출 정책이라기 보다는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유통기업/컨텐츠 관광 등)이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효과의 일부로 일자리 창출을 제시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 순수한 일자리 창출 계획과는 거리가 있음
- 전제조건(가정: U턴기업 10%인 경우, 외래관광객 2,300만명 달성시)에 해당하는 경제활성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의 효과는 애초에 의미가 없음. 그런 의미에서 기대효과는 매우 비현실적임
- 경제유발효과나 고용유발효과와 관련한 다수의 분석들이 많은 경우 실제 결과치와는 큰 격차를 보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현대경제연구원’의 분석 결과를 인용한 내용도 지극히 낙관적인 견해에 기반한 추정치에 불과함
- 일자리의 개수에 대한 목표와는 별개로 일자리의 질(quality)을 높이는 방안(정규직 확대)에 대한 고민이 부족. 특히 현 정부의 정책기조가 비정규직 등 나쁜 일자리만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과 비교하여 공공부문이 일자리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연령층에 따른 맞춤형 공약(특히, 청년세대 공약 관련)이 없는 점도 미흡하다고 판단됨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청년고용활당제 등과 비교하여. 새누리당은 청년고용활당제의 확대 및 연장에 반대). 제시된 세부프로그램(가령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회망 아카데미’ 등)의 경우에도 개별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측면이 있음

□ 더불어 민주당

○ 장점

-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법인세 인상 등과 같은 조세개혁과 재정개혁), 동시에 구체성과 실효성에는 의문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특히 비정규직 사용 억제방안)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

○ 단점

- 70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은 엄밀하게 말하면 청년 일자리 창출 공약으로 경제 전반에서의 일자리 창출의 목표 및 달성방안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에 필수적인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새누리당의 공약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미흡

- 공공부문 일자리 35여 만 개 창출의 산출근거가 미흡하며, 실노동시간의 단축으로 12만 개 일자리 창출의 산출근거(혹은 작동 기제에 대한 설명)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음
- 핵심공약 중에 하나인 ‘청년고용활당제’를 민간부문(대기업 포함)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입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음
- 관련 프로그램들이 단편적이고 나열식으로 제시되어 있음. 특히 일자리 창출 정책과 다른 경제분야 정책간의 연계성(일자리-경제성장-복지-경제민주화 등)에 대한 제시가 상대적으로 미흡
- ‘칼퇴근법’으로 대표되는 일련의 프로그램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노동/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한 과제로 판단됨

□ 국민의당

○ 장점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특히,비정규직의 사회보험료를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는 등의 비정규직 사용 억제방안)을 제시

○ 단점

- 경제상황 전반을 고려한 구체적인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이 없으며 주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대한 공약에 치중
- 핵심 공약인 청년고용활당제도의 경우, 국민의당만의 차별화된 공약이라고 보기 어려움
- 청년고용활당제도로 인한 최대 연간 8만3000개, 5년간 55만 개의 일자리 창출의 산출근거가 부족하고, 특히 민간부문(대기업 포함)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입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음
- 기타 다수의 청년 프로그램의 경우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보다는 노동/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 정의당

○ 장점

- 정책분야 간의 연계성(일자리-경제성장-복지-경제민주화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점

○ 단점

- 일자리 창출의 초점을 지나치게 청년층에게 두고 있으며, 경제 전반에 있어 일자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청년고용활당제도의 일부로서의 기회균형채용제도도 포지티브섬 게임이라기 보다는 제로섬 게임으로 인식될 수 있음. 실제 청년고용활당제의 경우 형평성의 문제로 인해 위헌소송

이 제기된 바 있음: 위헌의견 5, 합헌의견 4)

- 공공부문에서의 청년고용할당제 확대 및 연장은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나 (이미 시행 중), 민간부문(대기업 포함)에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입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다소 비현실적일 수 있음
- ‘청년디딤돌 급여’ 프로그램의 경우도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이라기보다는 청년 복지를 위한 정책으로 이해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으로 보임

4. 개선방향 (대안)

- 경쟁적으로 예상치(신규 일자리 창출 개수) 위주로 발표하다보니 일자리의 양과는 별개로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 (가령, 정규직의 확대). 좋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하에 보다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예상되는 일자리 창출 결과치의 산출근거가 불분명하거나 비현실적 (best case scenario 및 worst case scenario에 따른 최소치와 최대치 혹은 범위(range)를 제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 각 정당의 해당 공약은 정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소요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법에 대한 설명이 부족 (가령, ‘현행 개별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의 예산을 절약하여 재원을 마련하겠다’ 등과 같은 설명은 부적절해 보임)
- 개별 정책(프로그램)을 단편적으로 제시할 것이 아니라 정책분야 간의 연계성 (일자리-경제성장-복지-경제민주화 등)이라는 관점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음. 전반적인 경제정책의 방향성과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간의 연계성이 보다 쉽게 이해될 수 있는 형식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 특히, 전반적인 일자리 확대, 창출에 필수조건인 경제활성화 방안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새로운 공약 제시에 치중한 나머지 기존 공약 혹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을 내실화하는 방향에 대한 고민이 부재하며 기존 정책과의 정합성/차별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II 정치/행정

[이슈 II-1]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공약내용> 국회 선진화법 개정

- ❖ 대의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확립, 국회 운영을 정상화
- ❖ 민생안정, 국정개혁 등 국민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 도모
- ❖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토론과 조정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에 의해 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를 보완하고자 함

- 18대 국회에서 새누리당이 주도하여 ‘국회 선진화법’을 통과시켰지만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이나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 공약에서 제시한 것은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임.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장 본회의 직권상정 요건, 안건조정제, 안건신속처리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핵심임.
- 최근에 야당이 테러방지법을 놓고 합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했음.
- 그러나 여당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면서 ‘식물국회’, ‘무기력 국회’, ‘야당결재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음.
- 따라서 무제한적인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수결에 의해 의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을 하려고 함.
- 새누리당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하고도 법안처리가 어려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방식으로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여 입법활동이 지연되는 것을 막겠다는 것임.

2. 분석

□ 공약의 가치

- 새누리당은 다수결 원칙 확립, 국회운영 정상화, 국민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제시하였음.
- 그런데 이러한 가치가 국민전체의 생각을 고려한 것이며,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를 위하고, 초당적 시각에서 국회의 미래상을 담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의가 제기될 수 있음.
- 시간적 제한을 두고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중단 결의 대신에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해서 입법활동의 지연을 막는다는 것이 원래의 폭력국회나 날치기 통과를 했던 시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의문시됨.
- 정치적 구조에 따라, 특히 여대야소의 상황에서는 언제든지 날치기 통과가 가능하며 몸싸움이 빈번한 폭력국회가 될 개연성이 높음.
- 초당적 시각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민주주의 이념을 살리면서 힘의 논리를 배제하는 토론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임.

□ 공약의 목표

- 현재 제시한 공약은 공약의 구체적인 목표라기 보다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통하여 새누리당이 구현하고자 하는 가치라고 판단됨.
- 공약이 실제 개정된 국회 선진화법에서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들어날 필요가 있음.
- 핵심내용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해줄 필요가 있음.

□ 공약의 수단

- 이 공약은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이것을 위한 시간계획성, 구체적인 방법, 내용의 적합성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제시한 내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과거로 회귀하려고 한다는 여타 정당들의 우려가 매우 높은 관계로 심각한 정치적 논쟁과 갈등이 예상되는 공약인 만큼 국민들과 타당에게 내용의 믿음을 주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정보완을 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언제까지 고칠 것인지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정치적 타협과 결정이 가장 중요하지만 다양한 활동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것들에 대한 설명도 보완될 필요가 있음.

□ 공약의 성과

- '입법기능의 정상화를 통하여 국회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지향하여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는 기대효과를 제시하였음.
- 입법기능의 지연을 해결하는 것은 명약관화한 성과가 되어야 하지만 새누리당이 제시한 국회법 개정의 내용이 국민요구와 기대의 다양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임.
- 그리고 장기적 시각에서 국회법 개정과 개정된 법안이 올바른 접근인지를 신중하게 판단하고 근거를 제시해야할 것임.

□ 결론 및 시사점

- 국회 선진화법 개정이 추구하는 가치가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만큼,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시간적 계획, 방법, 내용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입법기능의 개선은 당연한 것이지만 절차와 방법, 내용이 사회적으로 공유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공약제시가 되어야 할 것임.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공약내용> 국회선진화법 개정

- ❖ 공약 없음으로 했음. 단 안전조정제도의 활성화 및 확대를 제안함.
- ❖ 국회선진화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새누리당의 개정안에도 반대하고 있음.

-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입장에서 특별한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국회선진화법에서 안전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확대하겠다는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현재의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안전 조정제도만을 활성화시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2. 분석

□ 공약의 가치

- 더불어 민주당은 “물리적 폭력 근절과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을 사회적 가치로 제시했음.
- 물리적 폭력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것은 과거에 국회가 보여준 면면을 보았을 때 매우 중요한 가치임.
-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야기시키는 폐단에 대한 비판도 많은데, 국민을 위하고 민주적 절차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키거나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약도 없으며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여당에서는 소수 야당에 의해서 국정이 마비되는 “소수독재법”이며 국회의 운영 효율성을 저해하는 걸림돌이라는 비판도 있음.
- 초당적 차원에서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민주적 절차,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 공약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음.

□ 공약의 목표

- 국회선진화법의 원안을 유지하되 안건조정제도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안건조정제도의 활성화와 확대”에서 “활성화와 확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이지 않음. 목표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목표치의 달성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공약의 수단

-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유지하면서 안건조정제도를 확대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음. 그런데 새누리당의 공약과 상대적으로 상반된 입장으로서 정치적 갈등과 실현가능성에서 문제의 소지가 많음.
- 실제 많은 국민들은 국회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생각을 가진 국민들도 많음.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공감을 얻어 낼 수 있는 공약과 대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공약이 되기 위해서는, 안건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절차, 정치적 문제해결 방안, 구체적인 법안 수정 내용에 대한 언급이 되어야 함.

□ 공약의 성과

- 더불어 민주당은 공약의 성과로서 물리적 폭력을 근절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점을 제시하였음.
- 이러한 목표를 구현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입법기능의 정상화와 효율성 제고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논리가 과정만을 너무 강조하면서 국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음.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어우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할 것임.
- 대화와 타협의 정치는 어쩌면 선진화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정치인들의 정치문화와 토론문화의 문제일 수 있음.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한지 검토가 요구됨.

□ 결론 및 시사점

- 더불어 민주당은 사실상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약은 없음. 다만 안건조정제도를 활성화시키고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음.
- 그러나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폭력을 근절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안건조정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가시적 수단과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 그리고 정치적 갈등이 예상되는 만큼,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실현가능성을 동시에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도 언급되어야 할 것임.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공약내용> 국회 선진화법 개정

- ❖ 구체적으로 공약이 무엇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음.
- ❖ 다만, 지나친 의사일정 지연 방지와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 악용방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음.

-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취지를 살리되 쟁점법안에 대해서 현행보다 처리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도 개정하여

예산안 심사 과정을 방지함”을 제시하고 있음.

- 국회선진화법을 유지하되, 의사처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 일차적인 목적임. 그리고 예산안 자동부의제도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개정하겠다는 입장임.
- 국민의당은 의사진행의 신속성 제고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만 과정적 처리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한다는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특히, 여당이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악용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을 강조하고 있음.

2. 분석

□ 공약의 가치

- 극단적 대립과 몸싸움을 포함한 폭력사태를 완전히 사라지게 했다는 점, 그 자체만으로도 국회선진화법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평가하고 있음.
-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이 궁극적으로 구현해야할 사회적·정치적 가치에 대한 설명은 없음.
- 물리적 몸싸움을 저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한발 더 나아가서 정치문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가치가 설정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가치는 실제 공약의 목표에 직접적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중요함.

□ 공약의 목표

- 국민의당의 입장은 의사일정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음. 그리고 예산안 자동부의제도에 대해서도 과정적 처리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명시하지 않았음.
- 의사일정의 신속한 처리와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개정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공약달성여부를 명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목표로 표현해줄 필요가 있음.
- 예컨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안전신속처리제에서 재적 과반수 요구에 의한 발의, 재적 3/5 이상의 찬성에 의한 가결, 안건 지정 후 상임위와 법사위 심사 등의 문제를 체계적으로 고려한 추진전략과 법안수정이 목표로 설정되어야 할 것임.

□ 공약의 수단

- 20대 국회에서 국회의 입법활동 지연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음.

- 그러나 여당과의 사이에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높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
- 또한, 비록 20대 국회에서 제안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했지만 20대 국회 중에 대선도 있고 많은 정치적 변화가 있는 만큼, 보다 구체적으로 시간계획 하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공약의 성과

- 입법활동의 신속한 처리는 가능하게 하지만 폭력방지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그러나 신속한 처리가 성과는 될 수 없음. 구체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심사기한 20일전에 본회의에 부의가 되도록 하여 과정적 처리나 전략적 이용 여지를 차단하여 공정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하겠다는 점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결론 및 시사점

- 결론적으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을 개선하겠다는 것은 하지만 구체적인 목표가 없고 이것을 진행하기 위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공약의 실효성있는 성과를 예측하기가 어려움.
-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고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국회선진화법에서 무엇을 어떻게 고치겠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시간계획, 정치적 갈등 해결방법 등을 계획해야 할 것임.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공약내용> 국회 선진화법 개정

-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약은 제시하지는 않았음.
- ❖ 다만 제정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 다만 폭력국회가 아니라 국회운영의 민주화가 필요하며 당 차원에서는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제시했음.

- 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의 필요성과 유지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정함. 그러나 선진화법 자체에 대한 개선이나 폐지보다는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여를 하지 못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을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섭단체요건을 수정하여 우선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2. 분석

□ 공약의 가치

- 국회선진화법을 통하여 합의제적 입법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함.
- 이것은 다수의 힘에 의해서 파행적으로 결정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입법절차의 제도화를 강조함.

□ 공약의 목표

- 국회선진화법에 관련된 공약은 없고 정의당의 교섭단체진입을 위해서 교섭단체 요건을 '원내 1석 이상 정당'으로 변경할 것을 제시함.
-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정의당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판단됨.

□ 공약의 수단

- 교섭단체 진입을 위해서 원내 1석 이상 정당으로 국회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기존의 교섭단체 참여 정당들의 반대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실현가능성을 고려해보아야 함. 실제로 교섭단체에 참여하는 정당들이 입장을 제시하지 않고 있거나 반대하고 있음.
-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지연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반대할 개연성이 높음
-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법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시간계획 등이 나와야 할 것임.

□ 공약의 성과

- 교섭단체 요건완화를 통하여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민주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점을 제시했음.
- 그러나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보완된 성과를 제시하면 좋겠음.

□ 결론 및 시사점

- 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수정, 보완, 폐지에 대한 공약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 다만 제정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있음.
- 대신, 교섭단체 진입을 위해서 교섭단체 요건완화나 폐지를 목표로 제안했음. '원내 1석 이상'으로 완화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지만 언제, 어떻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기 위해서 다양성과 민주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다수당의 외면이나 반대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이런 장벽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약을 보면, 비전은 불충분하지만 전반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의당은 국회선진화법과는 다른 맥락의 교섭단체 요건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음.
- 정치적 결정에 기반을 두고 있다 보니 전반적으로 결과가 명확하게 구체화되어 있지 않으며 근거는 언급이 전혀 없음. 다만 정의당이 원내 1석 이상을 기준으로 교섭단체 요건완화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음.
- 재원조달은 모두 당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의 구체성과 적절성도 대부분의 정당에서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곳은 없으며, 다만 여야간에 정치적 갈등이 내재되어 있는 공약인 만큼 실현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음.
- 다른 정책들과의 연관성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음.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약은 대부분의 당이 개선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새누리당과 나머지 당의 상반된 입장으로 구분이 됨.
-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공히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종합적으로 보면 공약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으며 목표와 달성방법 및 재원 조달에 대해서 구체성이 약하고 선언적·추상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임.

□ 새누리당

○ 공약의 장단점

- 장점

·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다수결에 의해서 의안을 처리할 수 있게 하여 무제한 의안처리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음. 일정기간 이상의 지연을 방지하고 입법 활동 진행가능.

- 단점

· 다수결에 의해서 의안처리가 가능해지면 과반을 점한 정당의 의사대로 법안 처리가 가능함. 즉 과반 이상을 점한 정당 중심으로 다시 파행적 처리가 가능해짐. 이러한 점 때문에 야당에서는 국회선진화법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음.
· 정당집단주의가 뿌리내려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부정적인 결과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음.

○ 방향성

- 민주주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 구현

· 정당집단주의가 지배적인 우리나라에서 재적의원 3/5의 찬성에 의한 필리버스터 중단과 신속처리 대상안건 지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봄.
· 따라서 다수결에 의한 의안 처리가 현실적이고 민주주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함.

- 당 간의 대립으로 지연되는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하여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정치 구현

· 국민을 위해서 중요한 안건이지만 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서 반대하면 전혀 의안처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도 무제한토론제는 개정되어야 한다고 봄.

· 합의에 도달해도 흥정에 의해서 법안심사가 부실하거나 끼워넣기 식으로 법안 왜곡.

- 그러나 야당에서는 여당 중심의 파행적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함.

○ 효과성

- 물리적 폭력국회를 종식시키고 일정기간 동안은 토론문화를 충실히 유지할 수 있음.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와 지연을 막을 수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의안처리가 가능해짐.

- 그러나 일각에서는 다수결의 원칙을 적용한다고 하지만 날치기 통과, 결국엔 폭력국회발생의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음.

- 단순 다수결에만 의존하지 말고 합의제 민주주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 국회선진화를 위해서는 토론문화 정착 및 활성화, 위원들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공약이 필요함.

○ 실현가능성

- 언급한 내용만으로 보았을때는 국회선진화법에서 다른 것은 모두 유지하지만 필리버스터만 제한하고 다수결을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해됨.

- 식물국회, 야당결재법 등과 같은 다양한 비판이 있으며 동조하는 여론도 많음. 그러나 야당의 반대가 큼.

- 이 공약은 정치적 실현가능성과 이것을 위한 시간계획성, 구체적인 방법, 내용의 적합성이 중요함. 그러나 현재 제시한 내용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새누리당의 공약에 대해서 야당들은 과거로 회귀하려는 것이라면 하나의 목소리로 비판을 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적 갈등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지난 1월에 제출한 국회선진화법에서는 의장의 상정 사유에 의원과반수 요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야당의 반대는 더욱 클 것임.

□ 더불어민주당

○ 공약의 장단점

- 장점

· 기존의 국회선진화법을 유지하면서 안건조정제도의 활성화와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운영 방지, 몸싸움 및 파행처리 방지, 소수당의 의견발명 기회 확대.

· 안건조정제도를 활성화 및 확대는 국회의 토론문화 형성 및 활성화에 기여.

- 단점

· 재적의원 3/5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의한 무조건적인 반대가능, 합법적 의안처리 지연기회 제공,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와 타협 가능, 직권상정이 쉽지 않아서 타협이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안될 수도 있음.

· 특히, 여야 대치가 극에 달했을 때 국회 공전이 불가피해 일명 "식물국회"로 전락할 우려가 있음. 이미 여당에서는 식물국회가 되었다고 비판하며 야당독재법이라고 비판함.

○ 방향성

-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공약은 없음. 맥락상으로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추정됨.

- 물리적 폭력을 근절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 안건조정제도의 활성화를 통하여 토론문화 형성에 기여.

- 그러나 여당에서는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민주정치에 위배되며, 거부권행사로 여당 입법안의 발목을 잡는 야당결재법이라고 비판 함.

- 또한, 국민을 위한 책임정치에 반하는 것이며 야당의 기득권이 되었다고 비판함.

○ 효과성

- 물리적 폭력을 근절시키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실현.
- 우리나라 국회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인 토론문화형성에는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제한과 재적의원 3/5 기준을 유지해 다수당의 법안 강행처리를 차단하고자 함.
- 그러나 여당은 동물국회는 피했으나 식물국회가 되었다고 비판함. 현행법으로는 국회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으며 순기능보다 역기능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많음.
- 그리고 재적의원 3/5의 기준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실현가능성

- 공약이 없기 때문에 실현가능성(시간계획, 재원확보 등)을 논의할 수는 없음.
- 다만, 현행 법안의 발전방안으로 안전조정제도의 활성화와 확대를 언급했는데 “활성화와 확대”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명시적이지 않음. 목표가 구체적인 결과물로 제시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여당이 개정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이미 개정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치적 갈등이 심할 것으로 판단됨.

□ 국민의당

○ 공약의 장단점

- 장점
 - 국회선진화법의 기본취지인 몸싸움과 파행적 처리는 방지.
 - 그러나 입법활동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지연의 개선과 여당 중심의 파행적 처리가 가능한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는 개선해야한다는 것임.
 -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의 중간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

- 단점

- 의사진행의 지연을 줄여야 한다는 점과 예산의 파행적 처리를 막기 위해서 예산안 자동부의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음.
- 의안처리 지연을 개선해야한다고 하지만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재적의원 3/5” 기준과 “의장직권상정” 사유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며 국회의 많은 입법활동 중에서 예산안의 파행적 처리에 대해서만 우려를 표명하고 있음.

·“재적의원 3/5”의 기준은 개정하되 예산의 파행적 처리는 막겠다는 것으로 추정됨.

·쟁점법안의 빠른 처리 대안과 예산안 자동부의제도 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인 공약언급이 필요함.

○ 방향성

- 식물국회와 예산안 파행적 처리 방지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함.
- 새누리당과 마찬가지로 식물국회를 방지하고 의사진행의 효율화 추구하고자 함.
- 그러나 파행적 처리의 여지가 있는 예산안 자동부의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
- 폭력국회는 막되 쟁점법안의 신속한 처리는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 원론적이고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대안이 만들어질 수 있을지 의문시 됨.

○ 효과성

- 가장 이상적인 목적인 극단적 폭력방지와 쟁점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공약임.
- 극단적인 폭력을 방지하면서 신속한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토론문화를 정착시켜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하는데 선언적으로 방향만 언급하고 있음.

○ 실현가능성

- 공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고 선언적으로 신속처리와 예산안 자동부 의제도 개선을 언급해서 근거없이 실현가능성을 논의할 수는 없음.
- 다만,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것인데 현실적 대안이 나올 수 있을지 의문시됨.
-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입법활동의 효율적 진행들은 구현하면서, 더불어 민주당이 강조하는 파행적 처리와 동물국회를 근절을 가장 중요한 예산안 처리에서만은 막겠다는 것으로 분석됨. 그렇다면 간과하고 있는 다른 많은 입법활동의 파행적 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급이 필요할 것임. 이것은 현재, 예산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입법활동에서 몸싸움과 파행적 처리를 차단한 선진화와 반대의 입장인 것으로 분석됨.

□ 정의당

○ 공약의 장단점

- 장점
 - 다수당과 수소당이 공존하는 민주성과 다양성 증진 강조.
 - 민주성 구현을 위해서 다수당의 힘으로 밀어 붙히는 후진적 정치문화를 종식

하고 국회선진화법을 통하여 합의제적 입법절차를 강화하고자 함.

· 다양성을 위해서 국회선진화법에서 교섭단체요건을 완화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그리고 기존의 물리적 몸싸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운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은 존재함.

- 단점

· 국회선진화법에서 핵심적으로 고려되는 의장의 직권상정 사유에 대한 부분과 재적의원 3/5에 대한 유지, 개정, 폐지에 대해서는 직접적 언급이 없음.

· 다만, 전체 내용에서 추론해보면, 더불어 민주당처럼 국회선진화법을 유지하되, 교섭단체 요건이 규정을 원내 1석 이상 정당으로 완화할 것을 제시함.

· 재적의원 3/5의 동의를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당리당략에 의한 무조건적인 반대가능, 합법적 의안처리 지연기회 제공, 무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정치적 거래와 타협 가능, 직권상정이 쉽지 않아서 타협이 어려운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자체가 안될 수도 있음.

○ 방향성

- 기존의 새누리당의 전횡적 입법처리를 막고 국회운영의 민주화 구현

- 다수당과 소수당이 토론과 타협을 통하여 민주성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정치문화 구현

- 그러나 정의당은 이러한 방향성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적 목표에 해당되는 교섭단체 참여를 더 중요한 목표로 정하고 있음.

○ 효과성

- 교섭단체 참여를 통하여 다수당과 소수당이 공존하는 민주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겠다는 점을 제시했음.

- 그러나 원내 1석 이상으로 교섭단체 요건을 완화하면 많은 정당들이 교섭단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장 직권상정에서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합의는 더욱 힘들어 질 것임. 현재 식물국회라는 비판을 받으며 새누리당은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어떻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 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함.

- 이것은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국회에서 정의당의 권한 강화를 위한 공약으로 판단됨.

○ 실현가능성

- 교섭단체 진입을 위해서 원내 1석 이상 정당으로 국회법을 수정할 것을 제안했지만 기존의 교섭단체 참여 정당들의 반대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적 실현가능성

을 고려해보아야 함.

- 다수당의 입장에서는 국회운영의 효율성과 국회선진화법에 의한 의사결정 지연의 가능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반대할 개연성이 높음.

- 정치적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실제 개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입법활동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전략, 시간계획 등이 나와야 할 것임. '원내 1석 이상'으로 완화조건을 명시적으로 제시했지만 언제, 어떻게 법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슈 II-2] 국회의원 기득권 개혁방안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공약내용>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개선
- ❖ 국회의원 면책특권 개선

<공약내용> 공직자 부패방지

-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기준 적용 강화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선물신고제도 관리 강화, 취업심사 강화 등
- 공공기관의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자 정보 공개 추진

□ 주요내용

○ 핵심 가치 및 목표

-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고,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혁신 지향.
- 국민위에 군림하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을 섬기는 정치로 혁신하여 국민의 신뢰 회복.
- 국회의원의 과도한 특권을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문화 개혁.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윤리의식을 제도화 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 뿐만 아니라 운용과정에서 기준적용을 강화하고, 능력 중심의 공정한 인사관리 정착을 위해 청탁행위 근절 방안 추진.

□ 구체적 내용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개선

-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개선 법안이 既 제출되었으며 최종 처리가 목표

- 국회 회기 중이라도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출석 의무 부여
- 체포동의안 72시간 내 미표결 시 다음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

○ 국회의원 면책특권개선

- 허위사실을 의도적으로 유포하거나 막말로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경우 및 금전적 이익을 유도하는 등 부패의 의도를 가지고 행하는 발언에 대해 면책특권을 제한하는 방안 추진

○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기준 적용 강화

-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 및 주식백지신탁제도 실효성, 선물신고제도 관리 강화, 취업심사강화 등

○ 공공기관 인사청탁 근절위한 청탁자 정보공개

- 청탁자 정보공개는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므로 2016년 제도화를 거쳐 2017년부터 시행

2. 분석

□ 총평

- 기존에 논의되고 제시된 공약들과 특별한 차별성을 가져오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그 효과성에 있어서는 회의적임
- 공약의 구체성이 적음. 다만 공공기관 인사청탁 근절을 위한 청탁자 정보공개 등이 타 공약대비 구체적인 것으로 판단됨
- 실제 최근의 미국 및 선진국의 행정개혁에서 정부의 효율성의 증대는 시스템의 투명성강화를 통한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이러한 구체적 공약들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으로 파악됨.
- 시스템적 투명성 확보방안, 개인적 관련자 처벌방안 등에 대한 정책의 실효성과 구체성에 있어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가치(명확성, 정합성, 소망성)

-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는 권력형 부정부패 근절을 통한 국민의 신뢰성 회복으로 명확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음.
- 국회의원과 공무원의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 척결을 통한 국민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타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와 정합적이고 소망성이 있다고 판단됨.
- 하지만 실제 이 분야에서 지향해야 하는 국가시스템의 투명성 통한 청렴성제고

- 와 이를 통한 효율성의 제고라는 가치의 연계가 부족하다고 생각됨.
- 실제 최근의 미국의 행정개혁에서 정부의 효율성의 증대는 시스템의 투명성강화를 통한 부정부패와 무능으로 인한 예산낭비 방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이러한 가치간의 연계에 대한 고민이 적은 것으로 파악됨.

□ 목표의 구체성과 측정가능성, 체계성

- 제도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측정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됨.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정책의 내용과 기준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현재로는 기존에 나왔던 내용들과 그리 다르지 않고 단순히 기존의 국회의원의 권리를 조금 제한하고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구체성 부분이 좀 더 보강되었으면 함.

□ 수단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

- 수단의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있어서는 단순한 제도의 도입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됨. 다만 정치적 실현가능성에서 공약에서는 국회의원의 특권을 줄인다고 하지만 실제 여야 합의와 본인들의 특권을 줄이는 것이므로 실제 개원후 실현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음. 하지만 합의만 된다면 충분히 실현가능한 공약이고 국민들이 원하는 공약이라고 생각됨.
- 본 제시된 공약들이 언제 어떻게 시행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시간계획성과 액션플랜은 부족한 상황임.
- 공직자 윤리기준 강화와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 개선의 경우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성과(효율, 대응, 효과성)

-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추가발생이 되지 않는 공약들이므로 잘 지켜만 진다면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다만 대응성의 측면에 있어서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 제한에 있어서는 국민들간의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체적인 타인명예훼손과 금전적 이익추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할 듯 함.
- 잘 시행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공약으로는 지금까지도 존재하는 것으로 특별한 효과를 가져올것인지가 회의적임.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공약내용>

- ❖ 정치자금 및 특수 활동비 등의 투명성 제고
- ❖ 불체포 특권 및 의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
- ❖ 공직자 부패방지 방안

□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

- 구속된 국회의원의 경우, 국회의원으로 누리는 지원 일시 중지
 - 각종 위원회 위원장 등 국회직 자동 박탈, 보좌진 및 의원실 지원 경비 지급 중단, 무죄판결시 지원금액 소급해 환급

□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 제정

- 공직윤리를 강화하여 부패 없는 깨끗한 행정 구현
 - 공직자 재산 등록자에 대하여 전면 재산 공개 추진
 - 금품향응수수 공무원의 승진 배제 및 면직 강화
 - 장차관의 로비스트화 예방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에 규정된 취업제한대상 로펌 등 소속 인사의 2년 내 장차관 임용 배제 등 고위공직자 취업제한제도 강화

2. 분석

□총평

- 국회의원과 관료의 부정부패 및 기득권 개혁방안에 대해서 더불어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들은 국회의원의 특권부분에서는 국회윤리실천특별법을 만들어 구속된 국회의원의 국회상의 특권들을 제한하는 내용을 제시한 것이 특징적임. 하지만 그 실효성과 실제 정치자금과 특수활동비의 투명성제고, 불체포 특권 등 기존에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시하는 대응성은 부족한 현실임. 단순한 예산상의 절감이 아닌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공직자 부정부패 근절방안도 기존에 나왔던 것과 특별히 다른 것이 없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개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가치 (명확성, 정합성, 소망성)

- 국회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본 공약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로 내세웠는데, 이는 국회의원의 권력관계에 의한 부패로 인한 국가 신뢰의 저하의 방지와 국가의 효율성 제고라는 가치와 비교했을 때 가치의 명확성과 소망성이 잘 못 선정된 것으로 보임.
 - 공직윤리 강화를 통한 깨끗한 행정구현을 내세웠는데 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가 효율성의 추구인지? 민주성을 추구인지

목표 (구체성, 측정가능성, 체계성)

- 달성가능한 목표로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의 제정이라는 것에서는 측정가능한 목표를 설정했다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이것은 일부에 국한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 위원장 직위의 자동박탈, 의원실 보좌진 경비지급 중단과 무죄판결시 지원금액 소급환급 등의 제시는 구체적인.
 - 공직윤리강화를 통한 부패없는 깨끗한 행정의 구현의 공약들은 구체적이긴 하지만 측정가능한 성과지표의 제시는 없는 실정임

수단 (실현가능성과 수단의 구체성, 시간계획성)

- 국회의원 윤리실천 특별법 제정을 통한 구속된 국회의원의 지원과 특권의 일시 중지 경우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은 있다고 사료됨. 하지만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경우와, 구속 후에는 국회의원직 상실로 관련 규정의 실효성이 없음.
 - 공직자 윤리법의 개정을 통한 재산등록자 전면재산공개와 금품향응 수수 공무원의 승진 배제 및 면직강화, 고위공직자의 취업제한제도 역시 기 시행되고 있는 것들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새로운 공약의 제시는 없다고 사료됨
 - 실제 크게 제시한 정치자금 및 특수 활동비 등의 투명성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성과 (효율성, 대응성, 효과성)

- 효율성과 대응성 측면에서는 국회위원 윤리실천법 제정을 통한 국회의원의 편익의 제한이 과연 국회의원이 이를 통해 얻는 편익과 계산했을때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구심이 발생함.

국민의당

1. 이슈에 대한 정당의 정책 소개

<주요 쟁점>

- ❖ 정치자금 및 특수 활동비 등의 투명성 제고
- ❖ 불체포 특권 및 의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
- ❖ 관피아 척결을 위한 고시 철폐
- ❖ 공직자 부패방지 방안

국회의원 부정부패와 기득권 개혁방안

-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 도입,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관피아 척결과 공직자 부패방지 방안

- 삼권분립 원칙강화를 위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강화

2. 분석

총평

- 국민의 당이 제시한 주요한 공약은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임. 다른 공약들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대의민주주제보다는 대의민주주의제도의 폐해를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 보완하려는 입장으로 국회내부의 개혁과 정부내부의 개혁에 관한 공약은 제시되지 않고 있음
 -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들의 제시가 되고 있지 않는 현실임

가치(명확성, 정합성, 소망성)

- 국민의 당이 추구하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치보다는 직접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 공약임.(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
 - 하지만 관피아 척결에는 삼권분립의 확립 등 공약간 가치의 정합성은 높지 않다고 봄

목표(구체성, 측정가능성, 체계성)

- 제시된 목표가 구체성이 부족하고 측정가능하고 체계적이지도 않음
- 제시된 공약이 현재까지는 추상적임. 수사적임

□ 수단(실현가능성과 수단의 구체성, 시간계획성)

-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경우 직접민주주의의 요소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기관인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이 적다고 사료됨.
-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경우 비용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
- 정치자금의 투명성제고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펼칠 것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 그 외에 관피아의 문제와 공직자 부패문제에 대해서도 구체적 공약과 그 실천 수단이 전무함

□ 성과(효율성, 대응성, 효과성)

- 국민발의제와 국민소환제의 경우 시스템적인 효율성에 있어서 어떻게 발의와 소환의 국민수의 요건을 정하고 어떠한 절차로 정할지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과 효율성, 효과성에 차이가 많음.
- 많은 사회적 비용도 발생할 수 있음.
- 잘 제도가 만들어져 실현될 경우 효과성이 있으나, 아닌 경우 형식적인 제도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 효율성이 낮음.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주요 쟁점>

- ❖ 정치자금 및 특수 활동비 등의 투명성 제고
- ❖ 불체포 특권 및 의원연금 등에 대한 개혁

-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
 - 정치자금과 관련해서는 익명 기부의 금지, 인적사항 공개기준 하향 조정(현행 연간 300만원을 연간 120만원으로), 고액기부자 신상정보 보고 강화(직장명, 직

위 등), 출판기념회의 선관위 보고 등이 필요함.

○ 재정운용의 투명성 제고

- 국회의 특수활동비는 폐지하고 정부 부처와 기관의 특수활동비는 특정업무를 명시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회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사후 결산제도를 도입해 5년 내지 10년 후에는 내역을 공개하도록 해야 함.

○ 정당의 책임성 강화

-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명시된 조항으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되어야 함. 각 정당이 당헌 당규를 통해 부패, 비리 혐의로 피의자신분이 되었을 때 자진출석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출당 및 제명 조치를 하도록 함.

○ 국회 특권 타파

-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는 한 차례 개선되었으나 국고로 전직 국회의원들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전면 폐지하고 헌정회에 대한 과도한 지원(생일축하, 해외연수 등)도 없어야 함.
- 이 공약을 통한 목표는 소액다수 후원의 확대, 특수활동비 축소, 체포동의안 표결 축소, 헌정회 불필요한 예산 삭감 등임. 이를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대, 각 부처와 기관의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 축소를 통해 투명한 예산집행의 확대, 국민의 정치 신뢰 제고 등 임.

○ 고위공직자 민간채용이 '관피아' 문제로 변질되지 못하도록 현행 최대 5년이라는 임기제를 폐지하여, 민간 전문가 출신 고위공직자가 책임성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구조로 개혁함. 동시에 성과평과와 퇴출제도를 강화함으로써 업무 능력을 통한 평가구조를 정착시켜야 함.

-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관련 조항을 강화하여 민간 전문가의 공직임용 및 민간 인제교류가 부정부패의 수단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해관계 충돌 방지제도' 도입을 통해, 공직자의 직무와 사적 이해관계의 충돌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공직 수행과정에서도 관리감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2. 분석

□ 총평

- 다른 정당들의 공약에 비해서 가장 구체적임.

- 헌법개정을 필요로하는 불체포특권의 폐지등이 아닌 정당책임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음
- 다만 실제 정당들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나의 문제는 또다른 입장으로 더 어려울 수도 있음.
- 정치자금 투명성제고 방안은 기존의 안들과 차별성은 없음.
- 공직자 부패방지에 대해서는 이해관계 충돌방지제도 도입이 현실적임. 다른 것은 기존의 것과 차이가 없음

□ 가치(명확성, 정합성, 소망성)

- 공약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투명성확대를 통한 국민의 신뢰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명확성이 있음.

□ 목표(구체성, 측정가능성, 체계성)

- 목표적인 측면에서 구체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있음

□ 수단(실현가능성과 수단의 구체성, 시간계획성)

- 수단적인 측면에서도 구체성으로 가지고 있음

□ 성과(효율성, 대응성, 효과성)

- 실제 도입되었을 때 성과는 근본적이 개선이 아니므로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총평

- 기본적으로 국회의원과 관료의 부정부패와 기득권개혁에 관련해서는 각 정당들이 제시한 공약은 낙제점에 가까움.
- 정의당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과 관료 부정부패와 기득권개혁에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기존부터 논의되어오던 당위론적인 일반적인 공약들이 제시되었고 구체성도 부족함.

- 새누리당은 헌법의 개정을 가져와야 하는 사항들(불체포 면책특권)의 개혁을 제시하여서 실현가능성에 문제가 있었고, 더불어 민주당은 국회의원 윤리특별법 제정으로 구속된 의원의 일부 편익금지 등을 제시하였지만 근본적인 처방법은 아니라고 사료됨.
- 더불어 각 당 모두 정치자금관련 공약은 없었음. 핵심은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정부패의 방지를 통한 국정의 효율성 달성인데 전혀 이런것에 대한 고민과 공약제시가 없었음.
- 국민의 당은 직접민주주의 방식인 국민소환제와 국민발의제제시가 특징임. 하지만 현재의 대의민주주의의 시스템하에서 관련된 공약을 전혀 제시하지 못했음. 정의당의 공약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기존에 제시된 많은 개선방안과 유사하고 특징은 없음.

-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공약 내용으로서 관피아 공무원 개혁으로는 공직윤리 개선과 공직자 재산등록강화 등 일반적인 내용이 주류를 이룬 현실임. 기존의 내용과 특정한 차별이 없고 구체성과 실효성도 적다고 할 수 있음.

□ 각 당의 주요 핵심공약 비교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국회의원 기득권 개혁	국회의원 불체포, 면책특권의 개선	찬성	내용 없음	내용 없음	반대 -정당책임성강화, 자율 규제 - 체포동의안 표결축소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위안 공약	내용 없음	내용 없음	회계방식 개선 통한 국민공개	-익명기부금지 - 인적사항 공개기준 하향 - 고액기부자 신상정보 강화
	세비인하 등 특권폐지 공약	내용 없음	구속된 국회의원의 각종 위원회 직위 해제, 보좌진 지원 제한 등	내용 없음	- 특수활동비 폐지 - 세비의 최저 임금제연동 - 헌정회 지원 삭감
	의원입법 사전영향	찬성	반대 -외부의 사후	반대	반대

	평가제도 도입 여부		평가 강화		
	기타특징	의원정계위하 윤리심사위원회 전원의부위원으로 구성		국민소환제, 국민발의제 도입- 국민직접통제 강화	
관료부패방지 및 행정개혁	공직자 부정부패 방지	-윤리기준 강화: 재산신고, 취업신고 강화 - 인사청탁자 정보공개	-윤리기준 강화: 재산등록 강화, 고위공직자 취업제한 강화, 부패공무원 승진 배제	내용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 법률 개정 - 이해관계 충돌 방지를 위한 법률 제정(민관교류 통제)
	고시제도 폐지여부	반대	- 반대	일부 개편	반대
	공직충원 제도개편	개방형 민간 임용의 확대 (실국장->과장)	실국장급 전면 개방형 공직선발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강화	직위분류에 입각한 공직선발 -안전직렬신설 (5,7,9급) 공채 통한 국가공무원 정식채용 민간경력자 5년임기제 폐지
	기타특징	급격한 제도 개편은 지양			

□ 공약에 관한 분석내용

○ 전체 총평

- 기존공약내용의 재탕

· 국회의원의 기득권 개혁과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각당의 공약들은 대체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어온 것을 제시하는 새로운 것이 없음.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개선의 경우 2012년에도 각당이 제시한 것으로 헌법개정 이유

로 4년동안 추진되지 못한 공약들이 다시 제시되었음.

- 실효성 높고 구체적인 정책공약 전무

· 정치자금법과 국회의원의 다양한 특권의 축소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음.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통한 갑질 예방을 위한 다양한 국회의원의 권력(국감과 예산안 심의에서 권력남용)을 축소하는 구조적개혁과 관련된 구체적 공약이 제시되지 않았음. 새누리당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의 임무이자 반면 권력의 원천인 법안제정관련 효율적이고 합리적 심사를 위한 사전입법영향 평가제도의 도입에 찬성하지 않음.

- 국민의 대응성 있는 공약부족- 국민 기대충족하지 못함

· 국민들이 요구하는 의원세비삭감과 무노동무 임금원칙등에 대한 대응하는 정책공약을 제시하지 못했음. 정의당의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임금의 최저임금제 연동 제외하고는 제시되지 않았음
· 전반적으로 다른 공약 역시 기존의 권리의 일부 제한과 투명성의 제고를 기하겠다는 것으로 공약의 구체성과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 새누리당의 경우 국회의원 특권인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의 개선은 헌법의 수정을 요하는 실현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수활동비 개선관련 등에 대한 공약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

-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윤리실천법 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공되는 일부의 편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역시 실효성이 적다고 볼 수 있음. 또한 정치자금 투명성제고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 국민의 당의 경우 관련 구체적인 공약이 없는 가운데 국민발의제와 소환제제의 제시는 국회내부에서 문제 해결보다는 대의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직접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것으로 실제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음. 정치자금에 관련해서는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회계제도 개선을 통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확보를 하겠다는 점은 실효성과 구체성이 있다고 판단됨.

- 정의당의 경우 불체포특권 폐지의 경우 새누리당과 다르게 반대하고 있으며 정당의 자체규제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정당이 얼마나 자체적으로 의원의 규제와 통제가 가능할지 의심이 됨. 더불어 실제 국회 특수활동비의 폐지와 국회의원 세비의 최저임금제 연동은 신선히고 과거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역시 국회내에서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할 수 있겠음.

- 관료의 부정부패 방지와 행정개혁을 위한 공약역시 각 정당별 큰 특징과 차이

가 없다고 볼 수 있겠음.

- 새누리당과 더불어 민주당, 정의당의 경우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겠다는 일관적인 공약이 제시되고 있음. 양당모두 재산신고 강화와 공직자 취업제한이라는 일반적인 공약과 기존에 제시된 공약의 반복이라고 판단됨. 다만 차이라면 새누리당은 인사청탁자의 정보를 공개, 정의당의 경우 이해관계 충돌 방지법의 제정 등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약으로 평가됨.
- 관련 공직자 인사제도 관련 차이는 있지만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고시제의 폐지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개방형 민간경력자채용제도의 확대 실시를 주장하고 있음. 더불어 민주당의 경우 실국장급 전면 개방형 공직선발, 새누리당은 개방형 민간임용의 과장급까지 확대를 주장하고 있음. 정의당은 고위직 민간경력자의 경우 임기5년제의 폐지와 이들의 민간에 포획방지를 위한 이해관계충돌방지 법안제시, 직위분류제적 인사제도 개편을 제시하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피라미드 구조의 공직자 인원구조에서 고시제 유지 후 고위직의 전면적 개방형 임명을 이야기 하는 더불어 민주당의 공약은 기존의 고시제도에 채용된 공무원들의 승진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모순이 발생하고, 과장급까지 확대를 제시한 새누리당 역시 같은 문제를 야기함.

III 외교/안보

[이슈 III-1] 대미·대중 외교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한중 관계 구축

- 한·미·중 3국의 공동 이해관계에 기반을 둔 협력 강화
 - 새누리당에 따르면, 한·미·중 3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한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 번영이라는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미국·중국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
 - 구체적으로, 굳건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미국과의 포괄적 전략동맹과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의 지속적인 심화·발전
 - 지난 60여 년간 한국과 미국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군사·안보, 경제, 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을 유지하였음
 -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지하고,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간 전략적 공조를 지속하여야 함
 - 우주, 사이버 분야 등 협력의 외연을 확장함과 동시에 기후변화 등 범세계 이슈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해야 함
 -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실질적 협력을 통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강화
 - 한·중 정상 및 고위급 간 전략적 소통뿐만 아니라 한·중 FTA의 발효 등 다양

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

- 한·중 관계가 북핵·북한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향후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협조 등에 도움이 되고 동북아의 평화·안정에도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함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북한 스스로 변화하기 위한 여건 조성 필요
 - 새누리당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꺾기 위한 기존의 방식은 실패하였으며, 북한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여건 조성을 위해 강력하고 실질적인 압박이 필요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공조
 -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고 한·미 간 긴밀한 전략적 공조 유지해야 함
 -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UN안보리 결의의 충실한 이행, 중국과의 협력, 주요국의 독자제재, 국제사회의 대북압박 등을 상호 추동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함

□ 전작권전통제권 반환 문제에 관한 입장과 실현계획

-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지지
 - 정부는 2014년 10월 한·미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시기를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으로 변경하였으며, 새누리당은 이러한 정부 입장을 지지함
 - 전환조건에는 ① 한국군이 한미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핵심군사능력 확보, ② 북한 핵·미사일 위협대비 초기 필수대응능력 구비, ③ 안정적인 지역안보환경 조성이 포함됨
- 2020년대 중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전개
 - 전환여건 조성을 위한 정부의 추진상황을 면밀히 체크함과 동시에 필요한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임
 -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2020년대 중반까지 달성하도록 관리, 감독할 것임

2. 분석

□ 외교정책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 새누리당에서 제시하는 한반도와 역내 평화와 안정이라는 정책공약의 가치는 외교 및 북핵문제 분야에서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으며, 외교정책공약에 있어서

정책 간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됨

-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공동의 이익을 갖고 있다고 전제되고 있지만 동시에 각자 국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국에 유리한 세계적, 지역적 질서를 형성하려는 전략적 경쟁자라는 점에 대한 고려가 미미해 보임
- 특히 미국과 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협력을 할 것이라는 생각은 소망에 기반을 둔 생각(wishful thinking)으로 보임

□ 외교정책공약의 목표

- 양자관계의 강화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 추구
 - 새누리당은 한미 포괄적 전략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상호 조화롭게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제시하지만, 이러한 조화로운 발전이 어떻게 실현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음
 - 또한 한미 간 협력의 외연을 확장하여 글로벌 파트너십을 강화하고자 하는 반면,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국한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국제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목표 역시 대북압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글로벌 이슈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의 목표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비함
 - 외교정책공약의 특성상 공약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수단

- 한미, 한중 간 협력 강화 수단
 - 한미관계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통적 의미의 군사적(연합방위태세 강화)·경제적(한미 FTA 이행) 협력에 더하여 우주협력, 사이버협력 등 새로운 영역으로 협력의 확대와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추진주체, 방법, 시간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낮음
 - 전작권전통제권 전환의 경우,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크게 반영하여, 공약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시간계획성 등이 상대적으로 높음
 - 한중관계와 관련한 공약의 경우,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북한·북핵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정착, 통일과정에서의 중국의 협력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약의 재정적·정치적 실현가능성, 구체성, 시간계획성 등이 미비함
- 국제사회와의 협력 강화 수단
 - 국제사회와의 협력은 북핵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의를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성, 구체성, 시간계획성 등이 미비함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의 지속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해 국제사회가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서게 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함

외교정책공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양자관계 강화를 통한 기대효과

-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은 그 실현가능성을 떠나 국익의 관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 하지만, 양국과의 경제적 관계의 강화, 즉 양국과의 FTA를 통한 교역과 투자의 확대를 통해 피해를 볼 수 있는 국내집단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민의 차별적 수요를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북한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의 기대효과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한미동맹, UN 외교, 주요국 외교, 국제사회에 대한 외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중국에 대한 고려, 압박 이외의 대안적 방식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될 수 있음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동북아 평화협력 실현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구현

○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연한 전략 추구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대립적 관계로 인식하지 않고, 한미관계를 기반으로 하되,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맞추어 보다 유연한 외교적 전략을 추구해야 함
- 한미동맹을 우선하면서, 한중관계와 대립되지 않도록 하는 외교적 노력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번영을 추구함을 통해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사이에서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균형외교를 달성할 수 있음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

-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의 기반으로 외교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음
- 한미동맹을 단순한 군사동맹이 아닌 보다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야 함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다양한 분야에서의 한중협력 강화

- 중국은 한국 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며 북핵문제 해결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음
- 한중관계는 경제관계를 넘어서 안보,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야 함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6자회담을 중심으로 한 다각적 노력

- 북핵문제는 사드배치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등의 위협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 사드배치는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판단을 하되 단순히 북한이나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드배치는 지양해야 할 것이며, 특히 한미일 3각구도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은 피해야 할 것임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하여 현재 UN 결의로 추진 중인 대북 경제제재는 유지하되 가장 중요한 수단인 6자회담 체계를 통한 대화를 이뤄내야 하며, 뒤이어 한미동맹강화, 한중협력강화, UN외교, 한미일3국 협력 순으로 접근하여야 함

전작권전통제권 반환 문제에 관한 입장과 실현계획

○ 전작권 반환에 대한 원칙적 찬성

- 전작권전권은 일정한 시점이 되면 반환되어야 하나, 이의 실현이나 시간계획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야 결정할 수 있음

2. 분석

외교정책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 동북아 평화협력 실현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구현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평화협력을 통한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번영 구현이라는 가치를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정책공약에서는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목표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재개
 - 6자회담 재개를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목표와 6자회담을 동아시아 안보협력체로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미중 간 균형외교 달성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고 미중 간 균형외교를 달성하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한미동맹을 우선한다는 정책과 균형외교가 서로 정합적인가와 구체적으로 실행가능한가라는 점에 대한 고려는 부족함
 - 외교정책공약의 특성상 공약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수단

- 6자회담 재개 달성 수단
 - 북핵문제 해결과 동북아 안보협력체 형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제시되는 6자회담 재개의 실현가능성과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음
 - 특히 6자회담 재개의 시간계획을 2017년 집권을 전제로 대통령 임기내(2018~2023)라고 설정하였는데, 이는 집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과 2018년 까지 목표 달성에 대한 구체적 노력을 전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또한 6자회담 재개를 최상의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다른 참여국들에게 어떠한 유인을 제공하여 입장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진작권 반환 문제
 - 진작권 반환 문제의 경우, 반환 찬성에 대한 원칙은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단, 정치적·재정적 실현가능성, 시간계획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외교정책공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양자관계 강화를 통한 기대효과
 - 한미관계, 한중관계의 강화와 조화를 통한 균형외교는 국익의 관점에서 유익할 수 있음
 - 다만 한미동맹을 외교의 근간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중관계를 발전적으로 모색하기에는 정책의 효과성이 낮을 수 있음
- 북한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의 기대효과
 - 6자회담 재개의 가능성이 불투명한 가운데 현재 제시하고 있는 시간계획(2018년 이후)으로는 북한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6자회담 이외의 정책대안에 대한 구체적 분석과 제시가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의 관계 설정

- 한미동맹과 한중 파트너십의 상호 조화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를 단순히 상호배타적으로 간주하거나 미중 간 기계적 등거리 외교를 추구하는 소극적 외교정책 발상을 지양함

□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한미동맹에 기반을 둔 포괄적 동맹관계의 구체화
 - 한미동맹은 한국 안보의 초석이며, 21세기 국제정치 발전에 합당한 포괄적 동맹관계를 구체화하는 외교를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1) 미국과의 정기적, 통합적 전략 대화의 제도화, (2) 포괄적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한반도, 아태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의 비전 및 발전방향 검토를 제시하고 있음

□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 중국과 다양한 내용과 방식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시키는 외교를 추진하여야 함
 -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1) 한중 분쟁 억제 및 관리, 북한 위협 억제, 지역 평화 및 탈지역 협력 추진, (2) 외교·안보·통상 분야에 걸친 고위급 대화를 통합하는 정기적 전략, 안보, 경제 대화 추진, (3) 양국 시민사회 간 다차원적 네트워크 외교 등이 포함됨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북핵·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동시적, 입체적 전략 추진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다자적, 양자적, 그리고 일방적 방식을 동시적이고 입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함
 - 특히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사후적 대응이 아닌 한중간 협력 및 신뢰

확보를 위해 사전에 지속적 노력을 전개하여야 함

□ 전작권전통제권 반환 문제에 관한 입장과 실현계획

-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필요성
 - 정부 및 여당의 전작권 반환 연기 및 조건부 반환 제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의견 없으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원칙적 입장임

2. 분석

□ 외교정책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 한미동맹과 한중관계의 상호 조화
 - 한미동맹과 한중파트너십의 강화와 상호 조화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가치, 바람직한 미래상이나 국가 이익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목표

- 한미, 한중 간 양자관계 강화와 조화를 통한 협력 증진
 - 한미 포괄적 동맹관계의 구체화와 중국과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심화라는 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하지만, 이러한 목표가 서로 정합적인가와 실행가능한가에 대한 고려는 분명히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수단

- 한미 포괄적 동맹관계의 구체화 수단
 - 한미 간 통합적 전략 대화의 제도화, 한반도·지역·글로벌 차원의 비전 및 발전 방향 검토를 통한 한미동맹의 구체화 방법이 제시되어 있으나, 대화·협력의 내용, 추진주체, 시간계획성 등에서 구체성이 낮음
 - 무엇보다 전작권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하여, 신중한 검토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재정적·정치적 실현가능성, 방법, 시간계획성 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음
-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심화 수단
 - 양국 및 한반도·역내 평화를 위한 협력, 안보, 외교, 통상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대화 추진, 시민사회 간 다차원적 네트워크 외교 활용 등 한중관계의 심화를 위

한 구체적 수단이 제시되어 있음

- 하지만,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협력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양국 간 신뢰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력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있으며, 어떠한 내용과 계획을 가지고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함

□ 외교정책공약의 성과

- 양자관계 강화를 통한 기대효과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를 배타적이거나 기계적 등거리외교라는 소극적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벗어나 상호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적극적 외교를 통한 국익 증진이라는 관점에서는 효과적일 수 있음
 - 하지만 다양한 정책대안을 고려하지 못하고 원론적 수준에서만 외교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 특히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외교정책 간의 우선순위가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구체적 계획이 부재함으로 인해 효과성에 대해 기대하기 어려움
 - 물론 중국과의 관계에서 양국 시민사회 간 다차원적인 네트워크 외교를 강조함으로써 국민의 차별적 정책수요를 반영할 여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중견·평화·가교 국가'의 비전과 정책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 외교·안보위기 극복과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비전 제시
 - 중견국가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며, 주변 강대국들이 지정학적 대립에서 벗어나 지경학적 이익의 조화를 이루도록 선도하고,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 해소 및 비핵화-군축에 기여하는 것임
 - 평화국가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동북아 평화공존을 위한 다자안보협력 선도, 민주적 군대와 인간안보를 구현하는 것임
 - 가교국가가 의미하는 바는 유라시아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통상과 교통의 중심, 다양한 문명과 가치가 교류하고 융합의 꽃을 피우는 가교, 북한을 미국 등 국제사회와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

- 이러한 비전은 군사안보 중심에서 탈피한 '인간안보' '포괄안보,' '공동안보'라는 안보관의 패러다임적 전환에 기반을 두고 있음

□ 바람직한 한미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수평적 한미관계 구축
 - 한미동맹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보다 튼튼하고 지속가능한 한미동맹을 위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SOFA의 독일 수준으로의 전면개정 등을 통한 수평적 한미관계로의 재설정이 필요함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기여
 -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과제의 달성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과 동시에 공격적인 한미합동군사훈련 중지, 비핵화-평화협정 회담 병행 용의 표명 등이 필요하며, 다자회담, 양자회담에서 미국의 역할이 중요함

□ 바람직한 한중관계의 상과 이를 위한 방안

- 한중간 전략적 대화와 협력 심화
 - 한반도 비핵화와 북핵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포괄적 타결을 위해서는 한중 협력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전략적 이해와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의 전략적 이해를 침해하는 사드(THAAD) 배치, 한·미·일 3각 동맹화는 한중관계를 심각한 위협에 빠뜨릴 수 있음

□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 포괄적 해법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
 - 북한붕괴-흡수통일을 통한 비핵화는 바람직하지 못하며, 비핵화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대화 복원, 북한과 미국-일본 간의 적대적 관계의 청산 및 정상화, 한반도 정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 등의 포괄적 해법을 추구하여야 함
 - 북한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미·한중 대화와 협력 강화 등 양자적 접근과 동시에 6자회담 복원 및 이를 위한 4자 평화회담 등의 병행 추진 등 다자적 접근을 병행 추진하여야 함

□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문제에 관한 입장과 실현계획

-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
 - 현 정부의 전작권 반환 연기 및 조건부 반환 등은 전작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

- 한 연기시키는 것이며, 전작권 환수 자체를 불투명하게 만들고 있음
- 전작권 문제는 주권의 문제임과 동시에 국가로서의 품격의 문제이며, 중견국가로서 한국의 위상에도 맞지 않음

2. 분석

□ 외교정책공약이 추구하는 가치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및 역내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
 - 정의당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상생 체제 구축이라는 정책공약의 가치를 일관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외교정책공약에 있어서 정책 간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아시아 차원 진통적·비진통적 다자안보협력 진전을 통한 평화공동체 토대 형성이라는 정책공약의 가치는 제시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명확성이 떨어짐

○ 인간안보와 공동안보 추구

-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적 인식과 접근에 기반을 둔 국가안보로부터 탈피하여 '공포·결멸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으로 하는 인간안보 및 강대국 간의 대립에서 벗어난 공동안보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이 정책공약에 명확히 나타나 있음

□ 외교정책공약의 목표

○ 외교 패러다임의 전환

- '중견·평화·가교 국가'라는 외교정책공약의 목표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세부 정책들과의 정합성도 높은 편임

○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자 및 다자외교

-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의 조화로운 발전을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 모두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주로 한미동맹 재설정, 한반도 비핵화 등 군사안보적 차원에서의 목표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경제·환경·문화 등 비군사적이고 다양한 지역적·지구적 이슈에 대한 양국 간 협력에 대해서는 목표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특성상 공약의 달성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수단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 수단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달성을 위한 다각적이고 포괄적인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 남북관계 회복을 목표로 한 각종 법안 제정은 2016년 총선 직후로 예정하고 있고, 이후에 후순위로써 대미·대중외교 관련 정책공약 실천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구체성 및 시간계획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반면 주변강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에 대한 실현가능성, 구체성, 시간계획성이 미비함
 - 또한 수평적 한미관계 설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속한 추진이라는 원칙론을 넘어서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이나 시간계획이 제시되고 있지 않음

□ 외교정책공약의 성과

- 대미·대중외교의 균형·조화외교의 기대효과
 - 한미관계 및 한중관계 사이의 균형외교는 국익의 관점에서 효과적일 수 있음
 - 다만 그 전제로 미국 또는 중국에 대한 지나친 군사적, 경제적 의존을 경계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근이 대미·대중관계에서 파생된 현재의 각종 사회적 문제 및 해결에 기여할 부분이 있을지 그 효과성에 대해서는 덜 명확해 보임
 - 전작권 반환의 경우, 그 효과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외교정책공약의 가치와 목표에서 인간안보의 측면을 강조한 것에 비하여, 이를 위한 보다 넓은 의미의 국제협력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음
- 북한문제 해결에 관한 공약의 기대효과
 - 북한문제 해결에 대해 압박 이외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성은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로 인한 국내적·국제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음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각 정당의 정책 비교

평가근거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장점	명확성	외교정책우선 순위	대중외교 정책	비전제시, 시간계획성, 10대정책포함
단점	정책대안부족	시간계획성	구체성	국민적 합의
방향성				
효과성				
실현 가능성				

□ 한미관계와 한중관계에 관한 외교정책공약

-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의 균형
 - 총론에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대미외교와 대중외교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지만, 상대적 중요성 등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음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은 공통적으로 한미동맹을 한국 외교, 안보정책의 가장 중요한 주축으로 제시하고 이를 포괄적, 다각적으로 강화하는데 동의하고 있는 반면, 정의당은 현재의 한미관계를 수직적 관계로 규정하고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을 제시하고 있음
 - 모든 당이 공통적으로 중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중국의 전략적 이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문제 해결
 - 북한·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모든 당이 동의하나 어떠한 수단이 우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림
 - 새누리당의 경우, 강력하고 실효성 높은 압박을 강조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6자회담 재개, 국민의당은 동시적·입체적 전략, 정의당은 양자와 다자회담의 병행추진을 강조하고 있음

□ 외교정책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 총선 외교정책공약의 특성과 한계

- 다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하는 외교정책의 특성과 국내 이슈에 초점을 맞추는 국회의원 총선거라는 선거 특성으로 인해 외교정책공약은 다른 공약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임
- 특히 외교정책공약의 특성상, 공약의 효과성·구체성·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함
- 정의당을 제외한 주요 정당들의 10대 주요 공약사항에서 외교정책과 관련된 공약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 구체성과 실현가능성

- 한미·한중 협력의 강화를 위한 정책 설계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정당이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데 비해, 그러한 목표를 실현할 구체적인 방안 및 단계적 목표 제시는 미비한 모습을 보여 정책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기 어려움
- 특히 외교안보 정책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시간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 유일하며, 전반적인 공약 내용 역시 다른 정당들에 비해 구체적임
- 공약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과는 별개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외교적 수단 간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유일함

□ 당별 장단점, 방향성, 효과성, 그리고 실현가능성

○ 새누리당

- 장단점: 새누리당의 외교정책공약은 목표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구체성이 부족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이 부재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효과성: 새누리당의 외교정책공약이 지향하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안정·번영이라는 가치는 정책공약 전반에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으나, 새누리당의 외교정책공약이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현가능성: 세부 외교정책공약의 경우, 새누리당이 여당이라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역시 일부 공약-예, 전작권전통체권 전환-을 제외하고는 재정 및 시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지 않음

○ 더불어민주당

- 장단점: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정책공약은 우선순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효과성과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효과성: 더불어민주당의 외교정책공약이 지향하는 가치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구현으로서 정책공약에서 일관되게 제시되고 있으나, 2017년 집권

을 전제로 하여 주요 외교정책공약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한 가치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실현가능성: 세부 외교정책공약의 경우, 북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식 중 6자회담 재개를 최우선순위로 설정하는 등 우선순위는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6자회담이 중단된 상황에서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국민의당

- 장단점: 국민의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대중외교에 관하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외교정책공약은 구체성이 미비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음
- 효과성: 국민의당의 외교정책공약은 대미·대중외교의 강화와 균형외교를 강조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무엇을 이룰 것인가라는 가치는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국민의당 외교정책공약이 위 목표를 실현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기도 어려움
- 실현가능성: 세부 외교정책공약의 경우,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계획이 부재함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정의당

- 장단점: 정의당의 외교정책공약은 외교 비전을 제시하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목표를 구체적인 시간계획과 함께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국민적·사회적 합의 형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
- 효과성: 정의당의 외교정책공약은 10대 주요 공약사항에서 7번째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교정책공약의 중요성에 대한 정의당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외교정책공약들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높은 반면, 이러한 정책이 다양한 변수가 작용하는 강대국 간의 정치 및 국내 정치에서 현실적으로 효과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움
- 실현가능성: 세부 외교정책공약의 경우,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예상되는 국내외적 갈등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이슈 III-2] 북핵문제/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새누리당은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있어 북핵문제 해결이 전제 조건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따라서 새누리당에 있어서는 안보분야의 이 두 개 이슈가 한 개의 이슈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수밖에 없음
- 새누리당의 입장은,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북한의 어떠한 핵보유도 불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함. 이러한 원칙아래 6자회담 틀 속에서의 평화적 해결, 또는 동맹국과의 지속적인 강력한 대북 제재조치를 주요 입장으로 가지고 있음. 특히 한미공동 ‘포괄적미사일대응작전’아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질적인 타격능력 확보 등 강경한 대북 핵정책을 통하여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방법만이 평화통일의 길임을 강조하고 있음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새누리당의 경우, 북한의 핵개발 문제를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를 북한의 핵무기 억제에만 초점을 맞추어 바라보고 있음.
 - 이러한 측면에서 북핵문제에 대한 공약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명확하며, 모든 안보정책 공약에 있어 정책 간의 정합성이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소망성의 측면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경한, 그리고 실질적인 제재조치 등을 통한 압박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불투명하다고 판단됨.
- 한편 남북문제 해결 또는 평화통일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새누리당이 추구하는 남북관계는 북한 핵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한정되어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

는 전제아래에서만 협력과 지원이 가능하다는 강력한 전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핵포기가 있는 경우에만 긍정적인 미래상이 가능하다는 한정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음.

- 새누리당의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과 관련된 정책공약은 그 지향점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압박’이라는 점에서 명확하지만, 압박에 의해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가정아래에서만 바람직한 미래상이 가능하다는 정책을 견지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남북관계의 측면, 즉 사회, 문화, 경제적 측면의 남북관계를 모두 북한 핵문제에 귀속시키고 있음

□ 정책공약의 목표

- 공약의 구체성의 측면에서 볼 때, 상대적으로 단일정책, 즉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으로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위협으로는 더 이상 체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상대적으로 수동적인 정책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 정책목표 및 목표달성 수단의 제시는 명확하지만, 이의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명확하지 않음. 즉 지금까지 북한의 핵관련 정책을 살펴보았을 때, 북한의 마지막 전략적 카드인 핵을 압박만으로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됨. 당근과 채찍 중 채찍만 제시하고 있다는 한계라고 보임.
 - 요약하면 북한이 압박에 의해 스스로 핵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 이에 대한 정책대안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임.
- 새누리당의 남북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정착 이슈에 대한 공약의 목표는 남북 평화통일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남북 평화통일 역시 핵문제 해결에 종속적인 문제로 나타난다는 점을 보았을 때, 새누리당의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정책은 제한적이라고 보임

□ 정책공약의 수단

-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유엔 등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으로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서도 마찬가지임.
 - 우리나라가 통제할 수 없는 다른 국가의 경우에 대한 정책대안이 모호함. 예를 들어 중국에서 대북제재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고 북한이 비핵화와 변화를 선택하도록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핵을 포기할 경우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도 제시”한

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 즉 북한과의 대화는 지속적으로 수행할 계획이 있지만, 이마저도 북핵포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상호신뢰 형성이라는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상호신뢰 역시 북한이 핵을 포기하여야만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특히 '실효적인 압박'으로서 미국등과의 공조를 통한 미사일체제 구축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아직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강력한 압박만이 과연 실효성있는 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 새누리당의 남북관계 개선 및 평화통일 관련 구체적 방안은 다음과 같이 도식화될 수 있음

- (국제사회의 공조를 통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 + 국내적으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과제 발굴이행 및 탈북민 성공적 정착 지원 등)) → 북한의 자각에 따른 핵포기 → 남북 간 신뢰형성 → 다방면의 대화 및 교류 → 북한주민의 민생개선/경제발전 지원 →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발전

○ 정책의 추진주체는 한국정부와 국제사회에 한정하고 있음. 즉 국내의 경우 “통일문화행사, 통일교육, 통일외교 등을 통해 국내외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준위」 등을 통해 민·관이 협업하여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통일준비 과제를 발굴·이행”이라는, 북한이 대상이 아닌 국내인 또는 해외 이해관계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진 정책만 제시되고 있음

○ 새누리당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비정치적 교류 방안 (남북주민 교류 방안, 북한주민 지원 방안), 정치적 교류 방안, 경제적 교류 방안은 미흡함

- 모든 교류방안은 북한이 핵포기를 하기 전까지는 진행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 경제적 교류방안이었던 개성공단의 경우, 개성공단이 핵미사일 개발에 악용되고 있기 때문에 개성공단 전면중단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주장함. (왜냐하면 개성공단을 통해 지급된 돈이 모두 핵미사일 개발의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기 때문에)
- 역사, 문화, 스포츠 등 비정치적 교류, 경제적 교류, 정치적 교류의 확대 역시 북한의 비핵화 및 올바른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견지를 가지고 있음

□ 정책공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새누리당의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약은 국민의 차별적인 수요가 반영되었다고 보기 힘들. 왜냐하면 모든 국민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조치만

이 단 하나의 남북관계 개선 정책이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임. 특히 이산가족상봉문제, 남북경협 등의 차별화된 수요에 대한 반영이 미흡함.

- 효과성의 측면에 있어서도, 국제공조에 의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효과적으로 작용될 것이라는 가정아래 다른 남북관계 관련 이슈들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책역량만으로 본 정책의 효과를 거두는 것은 힘들다고 판단됨. 또한 북한이 핵포기를 해야만 한다는 당위성만을 너무 강조한 정책이다보니,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국제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치 못한 상황에 대한 정책대안이 부재하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효과성이 클 것이라고 예상하기 힘들.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더불어민주당의 기본적인 입장은 북핵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간 신뢰 조성을 통한 남북대화가 우선적 정책 방향이라고 제시함. 남북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경제협력 및 사회문화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봄.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서는 남북협력, 국제협력(6자회담 참가국과도 긴밀한 협력), 남남협력 등 북핵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해법을 관련 당사국들이 공유하여 평화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국민의 안전과 평화, 민족의 과제인 민족통일 달성, 인간의 존엄한 인권 향상, 남북 주민 모두 윤택한 생활 보장, 세계시민과 선린친선 확대 등을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하여는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측면에서 북핵정책에 있어 명확성은 드러남. 또한 남북관계에 있어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하여는 반대의 입장

이며, 경제협력을 우선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의 목적으로 삼음.

- 북핵의 반대 및 군사긴장 정책방향보다는 경제협력의 우선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안보관련 두 가지 정책(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 상호 정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정책공약의 목표

-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및 통일이라는 궁극적인 목표가 제시됨. 이를 위해 무엇보다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통해 전면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이며, 다양화 사회문화교류를 촉진하여 동질감을 확대라는 목표를 제시함.
- 또한 구체적으로 UN안보리 결의 2270호의 성실한 이행 필요, 남북대화, 6자회담, 북미대화 등 대화를 통한 평화적으로 해결이라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안보정책과 경제정책을 연계하여 본다는 측면, 즉 남북경협이 한국에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동시에 북한에는 인간안보의 디딤돌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하고 있는 공약의 측정가능성은 정책수단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함.

□ 정책공약의 수단

-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9·19공동성명에서 명기한 것과 같이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목표이며, 이를 위해 압박과 대화의 병행,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를 이행하면서 6자회담 재개 등을 통해 북핵문제의 실질적 해결 필요하다고 봄.
- 남북관계에 있어 개성공단 폐쇄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본질적인 해법으로 보기 어려우며, 개성공단의 재가동이 경제협력을 통한 신뢰증진에 필요하며, 또한 남북경협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이기에 개성공단으로 상징되는 남북경협은 더욱 발전되어야 할 상황이라 판단함. 또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보다는 우리경제를 제재하는 역효과도 크다고 판단하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할 예정임.

-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시하고 있음. 먼저, 남북대화의 장을 열기위한 수단으로서,
 -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공동선언, 10·4선언 이행
 - 튼튼한 안보 구축과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남북 당국회담 추진
 - 남북, 북미회담과 6자회담 개최 등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 둘째, 경제적 협력의 수단으로서,

- 개성공단 재가동 후 안정화·국제화 실현
- 남북상생경제 3대 SOC사업 추진
- 환동해·환황해 남북상생 경제협력 사업 추진으로 북방대륙 진출
- 남북 접경지역 4대 상생특구 설치
- 남북 자원협력 진담기구 ‘남북자원협력진흥재단’ 설치
- 한반도 프라이카우프 추진
-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 손실보상 특별법’과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 피해지원 특별법’을 제20대 국회 최우선 법안으로 제정 추진 등임.
- 셋째, 한국정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여·야·정·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통일국민협약’ 체결 추진을 제시함.

-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를 우선적으로 정책목표로 두고 있으며, 추진주체로서 남한정부뿐 아니라 남/북정부, 주변국, 사회문화적 교류를 위한 민간 등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정책수단, 특히 경제협력에 있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는 구체적 언급이 없음

□ 정책공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를 위한 기본 초석으로서 경제협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책수단을 제시하였고, 남북관계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상정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차별적인 수요를 반영하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 최근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정책수단들의 비용에 대한 논의가 없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북한정권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측면에서 정책의 실효성은 검증되지 않다고 보임

- 한국사회의 북핵 및 남북관계와 관련된 요구사항은 평화적인 방법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남북관계 개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통일이라고 볼 수 있음. 이를 위해 남북대화 및 신뢰조성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남/북 같이 경제적 발전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측면에서 있어서는 정책공약이 바람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임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국민의 당은 북핵은 용납할 수 없으며 포괄적 접근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실현 및 한반도 평화정착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단계별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개성공단과 사드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2. 분석

□ 정책 공약의 가치

- 국민의 당은 남북관계에 있어 한반도 평화공존과 비핵화를 추구해야 할 가치로 제시하고 있음
-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북핵정책에 있어서의 명확성은 지니고 있음.
-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공존의 가치는 북핵 정책과 남북관계 개선 정책에서 상호 정합성을 지니고 있음

□ 정책공약의 목표

- 국민의 당은 한반도 비핵화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는 첫째, 6자회담과 남북 대화를 병행해서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 둘째,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단

계적이고 포괄적인 해법 추진, 셋째, 대화와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비확산 합의 이행 유도를 제시하고 있음

- 한반도 평화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한 목표로서는 첫째, 남북대화 재개와 정상간 핫라인 설치, 둘째, 한반도 평화공존의 제도적 틀 마련, 셋째,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고 있음
 - 공약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 ‘포괄적 해법 추진’ 등 다소 추상적으로 제시되어 있음
 - 정책 목표가 단계별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구체적으로 년도별 목표치가 설정되어 있지는 않음

□ 정책공약의 수단

- 국민의 당은 정책의 가치와 목표는 제시되어 있으나,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계획, 추진 방법, 시간계획 등은 공약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분야별 교류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국민의 당 정책공약에서 한반도 비핵화 수단 중 하나인 “대화과 억제를 통해 북한의 핵비확산 합의 이행 유도”에서 억제의 주체, 방법, 수단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함
- 개성공단과 사드배치 이슈에 대해서는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의 중요한 교두보이므로 신중하게 재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함”, “사드배치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무모하게 강행해서 외교적 실리와 명분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의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당은 ‘대안 제시’라는 측면에서 그 실효성이나 구체성을 미약함.

□ 정책공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국민의 당의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공약은 국민의 차별적인 수요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정책의 구체성이 떨어짐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정의당의 안보정책 비전은 ‘중건·평화·가교 국가’임. 평화공존의 새역사를 만드는 다자안보협력 선도, 민주적 군대, 인간안보 구현을 목표로 하며, ‘나’만의 절대적 안보추구에서 ‘공동안보’ 추구로 인식의 전환을 내세우고 있음.
- 이에 따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진체제의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평화적 수단을 통한 한반도 평화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평화정책의 핵심으로서 북핵문제 해결을 들고 있으며, 이는 접근을 통한 상호 이해와 협력의 제고를 통한 변화, 남북교류협력과 평화정책의 과정으로서의 통일이라는 확고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 좁은 의미의 군사안보와 정치적 조건의 변화와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 즉 정경분리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것이 포괄안보를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
-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책으로 포괄적 해법을 제시함. 민주당도 포괄적 접근을 제시하였지만, 민주당과의 차이점으로 안보 대 안보 교환(비핵화-평화협정-북미수교)과 남북경협을 병행하는 포괄적 해법임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정의당의 경우 북핵에 대하여 단호히 반대/규탄함. 그러나 북한뿐만 아니라 남한의 핵개발에도 반대함. 핵무기를 단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의한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핵무기를 비인도적인 무기, 인류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는 무기로 규정함.
- 무엇보다 우리의 통일방안과 대북정책에 대한 북한의 불신을 잠재우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파악하고 있음(더불어민주당은 경협을 통한 신뢰조성이라는 틀에 한정되어 있는 반면 정의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신을 없애는 포괄적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새누리당)’만으로는 북핵문제 해결도, 남북관계 개선도 힘들다고 보고 있음. 북핵의 실질적 해소와 경제적 위기 극복을 포괄적으로 또는 병행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남과 북이 상호 win-win,할 수 있다고 봄.

- 정책의 소망성의 측면에서 다른 당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바람직한 미래상, 국가 전체(남북한)의 이익과 연계되어 있다고 보임.

□ 정책공약의 목표

- 남북간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한 목표임. 최근 남북 대화가 부재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남북간 적대적 관계가 고조되었기 때문임. 대화가 없는 가운데 북한이 폭주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정책문제 해결 지점이라고 보고 있음. 이를 위해서 정의당에서 제시하는 정책은 안보 대 안보의 교환임. 즉 북미수교와 비핵화 및 정진체제에서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교환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현재 미국의 대북 제재일변도 정책의 기초, 그리고 향후 미국의 대선 결과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실효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또한 현재의 국제사회의 제재조치가 일정시점 이후에는 중국이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이 이러한 대화에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앞서의 포괄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함
- 정의당에서 제시한 안보정책을 경제정책뿐만 아니라 다른 정치,사회,문화정책과도 연계하여 파악하고 있음. 즉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남북경협이 한국에도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며, 동시에 북한에는 인간안보의 디딤돌로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동시에, 정의당에서 제시한 포괄적 접근에 의하여 정치적으로 냉전시대의 유산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 사회문화적으로는 창조적인 문화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정책공약의 수단

- 무엇보다도 적대적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대북제재만으로는 정책이 부족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북한의 자세변화 유도, 주변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한 북한 고립화 등을 고려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고립화는 북한정권 붕괴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비핵화-평화체제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된다고 봄.
- 개성공단 사업은 우리에게 첫째,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 상생의 경험이라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둘째, 북한 주민의 대남 적대감 완화와 남북 주민간 이해 증진, 동질성 회복 및 북한의 시장경제 훈련 등 통일 준비, 셋째, 전진 배치되어 있던 개성 일대 휴전선 부근 북한군의 후방 철수 등 군사적 이익과 긴

장 격화 방지 등의 안보적 이익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을 함. 이에 따라 반드시 재개되어야 함.

○ 정의당은 사드 배치에 대하여 부정적 견해를 가지고 있음. 이유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러시아의 반발은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안보현안인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그리고 중국-러시아 대 미국-일본-한국의 대결 구도를 만들어 한국으로서는 최악이고 북한으로서는 잃을 게 없는 대륙세력 대 해양세력의 안보차원의 대결체제를 유발할 수 있음. 제1의 무역관계인 중국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은 경제적 안정을 해쳐 국민안전, 포괄안보를 해치게 가능성이 있다고 봄. 또한 앞으로 북핵문제가 대화와 제재를 병행하는 이란식 해결방법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 사드배치는 유야 무야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음.

○ 정책공약의 구체적 수단으로 정부가 이하의 구상 및 원칙 등에 입각한 종합적 계획 및 실천 이행안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결의하고, 구체적 실천에 나서도록 압박 - 우선, 조속한 당국회담 재개, 혹은 특사 파견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 형성 -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 철회와 조속한 재가동 추진 -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상설화(와 교환) - (앞의 두 가지 과제 실천으로 경험과 교류협력을 복원한 후의 과제가 되겠습니다만) - (중국-대만 경험의 빛과 그림자로부터의 교훈에 입각한) ‘남북경제사회협력강화협정’ 체결: 경험 활성화 및 제도화 지원, 제조업 공동화 등으로 인한 실업과 임금인상 억제 등의 우려되는 부작용으로부터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 추구 - 남북 철도·도로의 대륙과의 연결, 남북러 가스관 연결, 환황해-환동해 경제권과 한반도 +동북3성+연해주 경제권 형성으로 남북경제공동체와 유라시아대륙경제 구축의 연계 - (당국회담으로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형성된 후) - 정상회의의 조기 개최 추진 및 남북 당국 간 각급 회의의 정례화 - 국회·지자체·민간 교류의 자율성 보장과 활성화 등.

○ 시기상 순서로서 가장 시급한 개성공단 재가동을 매개로 한 대화재개가 이루어질 것을 제안. 이후 조속한 당국자 회담, 남북정상회담 모색, 이후 정상회의-장관급회의-실무자회의 등을 정례화하여야 한다고 봄. 이를 바탕으로(또는 이와 동시에) 다양한 경험사업과 금강산 관광,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등 교류협력이 이어져야 하고, 이후 더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협력 재개가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남북당국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정책공약의 성과 및 기대효과

○ 앞에서 제시되었음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북핵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각 정당의 정책공약 중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이슈	새누리당	더불어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북 핵 문제	전략적 인내: 지속적 압박에 의한 북한의 핵 포기 유도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대화를 통해 해결(경험 등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반도 비핵화	포괄적 해법에 의한 남북 원-원 유도
개성공단	압박수단으로 폐쇄할 수밖에 없음	남북신뢰구축, 남북 동반경제성장을 위해 재개해야 함	폐쇄는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되지 않음	남북관계의 지렛대 역할(경제적, 민족통일성 회복, 군사적 긴장 방지)이기에 반드시 재개되어야 함
미사일 체계(사드)	킬체인 구축	신중한 검토 필요: 주변국 간 긴밀한 논의 필요	우리군의 독자적 방어체제 구축 대안 및 공문화 필요	부정적 견해(한/중 관계 악화/미국과 중국관계 등 고려할 때)
남북관계 개선	대북압박이 우선, 경제/사회 협력은 북핵포기가 선행되어야만 가능	경제/사회적 협력을 통한 신뢰조성, 이를 통한 남북대화	남북간 대화와 협력,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 통한 평화적 관리	정진→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포괄적 접근
주요 정책 목표/수단	강력한 압박→북핵포기	포괄적: 남북경협→신뢰구축→남북대화	대화과 억제: 세부수단 제시 않음	포괄적 해법: 안보대안보 교환과 경험 병행

○ 정책 수단의 시기 또는 우선성에 있어 각 당은 서로 차별화된 공약을 보여주고 있음. 각 당별 정책공약의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새누리당은 현재 북한의 수소폭탄, 핵미사일 등 잠재적 위협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 핵문제를 통하여 모든 평화통일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의

문제를 집중시키고 있음. 즉 북핵문제/남북관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제시에 있어 북한(주민)에 대한 정책은 모두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조치에 의한 '북핵문제 포기'라는 단서가 이행되어야만 시행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하여 바람직한 정책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미사일체제 도입에 대하여도 찬성의 입장을 보임. 이외 통일준비노력으로는 국내 그리고 해외에 대한 정책은 통일공감대 확산 등만이 제시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남북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음. 즉 경제협력이 남북대화를 위한 신뢰조성이라는 전제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음. 구체적으로 경제협력이라는 정책수단을 이용한 신뢰회복이 있어야 하며, 신뢰에 기반한 남북대화 재개, 그리고 이에 따른 더 포괄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제시함.
- 국민의 당의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조금 추상적인 정책문제 제시에 그치고 있는 등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개성공단에 대하여는 개성공단 폐쇄가 전략적으로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음. 또한 사드미사일체제에 대하여는 우리군의 독자적 방어체제 구축 대안 및 공론화 필요라는 다른 당들과는 약간 차별화된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다른 당들과 비교하여 국민의 당은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안보이슈에 대하여는 정책내용 자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정의당은 개성공단의 재개를 위한 대화를 가장 시급한 정책수단으로 제시하고 있음. 정의당은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지렛대역할로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경제적, 민족동질성 회복, 군사적 긴장 방지를 위한 주요 정책수단이기 이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재개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음. 또한 사드미사일체제에 대하여 한/중 관계 악화 가능성, 미국과 중국관계 등 고려할 때 불필요한 논의라고 보고 있음.
- 정의당의 경우 다른 당의 정책보다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정책수단 및 시기상 우선순위에 따른 남북관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또한 다른 당과 비교하여 가치적인 측면에 있어 북핵이 아닌 모든 핵무기에 대한 부정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에 있어서도 정진체제가 평화체제가 가야 한다는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인 목적과 이를 위한 안보대안보 교환과 경제협력의 병행, 그리고 대화를 위한 개성공단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남북 당국간 대화의 순서 등에 대한 방안, 마지막으로 경제협력과 군사안보의 분리, 사회문화적 접근까지 상대적으로 더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각 당의 정책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정리될 수 있음.

- 비전제시의 여부만을 놓고 보았을 때, 각 정당들은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비전의 내용에 있어서도 한반도 평화정착이라는 유사성을 지니고 있음.
- 비전 달성을 위한 방법론에 있어서는 정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 이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하여 새누리당은 '강력한 제재에 의한 북한의 핵포기'라는 제재적 수단을, 더불어민주당은 무엇보다 '경협을 통한 신뢰조성'이라는 유인적 수단과 포괄적 해법을 제시하고 있음. 정의당은 유인적 수단과 포괄적 해법을 제시한 점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약의 유사성을 지님. 반면, 안보대안보(비핵화-평화협정 및 북미수교) 교환을 해법으로 제시한 점은 타 정당들과 차별화됨. 국민의당은 대화와 역제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개성공단과 사드배치 등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불분명함
- 재원조달의 경우 새누리당의 경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재원조달 내용이 없을 수 밖에 없음(해당되지 않음). 그러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경우 경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경협을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새누리당의 경우 평화통일을 포함한 모든 남북관계 개선을 북한 핵포기라는 선제조건에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정책이 상당히 단조로우며,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음. 실현가능성 역시 주변국의 역학관계에 대한 고려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낮다고 보임.
- 더불어민주당은 남북대화가 경협에 의해 가능할 것이라는 측면에서는 새누리당보다는 구체성이 높고, 경협과 다른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수단에 있어 상당히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정권이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경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다는 측면에서 구체적 달성방법과 실현가능성이 약간 낮은 것으로 보임. 정의당의 경우, 정책의 달성방법의 구체성에 있어서는 다른 당들과 비교하여 가장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음. 또한 다른 당들과 달리 주변국들과의 관계에 의한, 그리고 남북대화 및 경협을 긍정적인 결과만이 올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에 대한 고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됨. 그러나 안보대안보 교환에 있어 정치적 실현가능성은 미국의 대북정책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음.
-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의 경우, 새누리당은 거의 없음. 더불어민주당은 경제정책과의 연계성만을, 정의당은 경제, 사회문화정책 등 상대적으로 더 포괄적인 정책연계성을 보이고 있음

○ 요약하면, 각 정당의 북핵문제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정책공약은 차별성이 있다고 보임. 그러나 우선적 정책수단의 차이, 정책의 구체성에 있어서의 차이 등이 나타나고 있음.

IV 교육/환경

[이슈 IV-1] 교육분야 정당별 정책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정책 내용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사교육 수요가 높은 영어, 수학, 예체능 교과에 집중 대응하여,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계 내에서 흡수할 계획
 - 초등학교 돌봄교실 확대 등 학교급 별 맞춤형 정책을 꾸준히 추진
 -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동 대상, 한국 장학재단 주관사업인 대학생 지식봉사활동을 연계하여 전국으로 확대
-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K-MOOC) 서비스 활성화
 - K-MOOC 개설 강좌수 '15년 현재 10개 대학*에서 27개 → '16년 100개 이상으로 대폭 확대
 - 다양한 이수결과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학습자의 적극적 수강 유인 제공
 - 일반 오프라인 대학에서 K-MOOC를 활용한 다양한 수업 활용* 형태 확산
-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 무료로 제공되는 지상파 EBS-TV(교육방송)의 채널을 한 개 더 추가하여 서민층의 초·중등학생 교과목 학습용 프로그램과 영어학습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여 연간 1,800억원 이상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
- 저소득층 영재 발굴 및 교육 지원
 - 영재교육 소외자를 고려한 맞춤형 진단검사 지원 등을 활용하여 소외자 선발 확대

- 표준화된 검사 창의성 검사 등 선발방식에서 교사들이 충분한 기간 동안 학생을 관찰하여 영재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교원의 연수 기회 확대로 교사 관찰 및 추천제 내실화
- 영재교육 소외자의 특성에 대한 기초연구 추진 및 과도기적 프로그램 지원 확대

○ 재원조달방안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새누리당 10대 공약 재원 조달 방안(※별첨)

2. 분석

□ 정책 공약의 가치

- 새누리당의 교육 공약은 저소득층 사교육비 경감 추진, 무료 한국형 온라인공개강좌 서비스 활성화,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저소득층 영재발굴 및 교육 지원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공약은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확대(사교육비 경감,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 저소득층 영재발굴 및 교육지원)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학습 병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K-MOOC 사업 확대 공약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집권여당의 공약답게 행정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명확성은 높은 편이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성이 높음
- 공약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타 공약과 정합성이 있으며, 상충되는 측면은 없음
- 제시된 공약 4종의 구체성은 높으나 바람직한 거시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아님. 주로 현안에 대한 해결책의 성격이 강함
- 제시된 공약은 교육계의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교육비 경감, 평생학습체제 구축, 저소득층 교육기회 확대, 영재 발굴 등으로 구성되어 우리나라의 전체 국가 이익에 적절히 부합하고 있음

□ 정책 공약의 목표

- 제시된 공약이 정책 및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구체성은 높은 편임
- 공약이 세부과제 및 구체적 내역사업과 산출물을 제시하여 측정가능하며, 계량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목표치가 되는 산출물을 제시하였음
- 연도별 목표치를 제시한 것은 아니나 세부 정책 목표를 제시하여 측정가능성을

- 제고하였음
- 제시된 공약은 현재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교육 관련 국정과제(사교육비 경감, 평생학습체제 확대 등)와 적절히 부합함

정책 공약의 수단

- 재정 조달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고, 세출 조정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기존 법체계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충돌되는 면은 발견되지 않음
- 공약집에서 추진 주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기존 행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어서 추진주체나 추진방법은 비교적 명확한편임
- 시간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음

정책 공약의 성과 내지 기대효과

- 추정소요예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서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효율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가 불가능함
- 제시된 공약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에 대한 해결방안이며 국민들의 요구에 대응하였다고 판단됨
- 사교육비 문제,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제한, 평생학습체제 구축등은 매우 축적된 정책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서 현재 수준의 공약으로 효과적인 해결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음. 부분적 정책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임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내용

-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
 - 소득계층 간 격차완화를 위하여, 중산층·서민 학부모의 고통인 대학등록금에 대하여 저소득층 대상(예: 소득 3,600만원 이하)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현 교육비 세액 공제와 중복지원 배제)

- 장기적으로는 소득하위 계층에 대하여 장학금 제도와 별개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이행기간

- 2016-2020년

○ 재원조달방안

- 계층간 교육기회격차완화를 위한 교육비 소득세 환급정책의 경우 대략 0.65조 소요

2. 분석

정책 공약의 가치

-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는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로 명확한 편임. 공약이 단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타 공약과의 정합성 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 공약이 지향하는 바는 중산층 및 서민 학부모의 대학등록금 경감으로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가치에 충실함
- 공약이 단일하게 제시되어 미래상이나 국가전체의 이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

정책 공약의 목표

- 제시된 공약은 중산층 및 서민층의 대학등록금에 대한 감경, 세액공제를 제시하여 구체적이며 측정가능한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전체 교육정책에 대한 거시적 체계와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서 상하위 정책 및 법제도와와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움

정책 공약의 수단

- 필요 재원(계층간 교육기회격차완화를 위한 교육비 소득세 환급정책의 경우 대략 0.65조 소요)을 제시하고 있으나 조달계획이 명확하지 않음
- 공약의 추진 방법, 시간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 수단의 구체성, 시간계획성 등을 판단할 수 없음

정책 공약의 성과

-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교육기회 제공과 고등교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차별

적 수요를 반영한 공약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효율성 측면에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음

- 저소득층에 대한 등록금 환급 및 세액공제의 경제적 효과는 인정될 수 있으나, 소요재원에 대한 재원 조달 방법을 적시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중세 또는 세출 조정)이 필요함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입시제도 단순화
 - 대학의 수시전형 모집 비율은 70%에 달할 정도로 확산되었고, 지나치게 복잡한 전형 방법으로 인해, 사교육이 비대해지고 전형 컨설턴트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시전형 모집을 20% 이내로 제한하고, 입시사설학원의 선행교육 축소를 유도함
- 의무교육 내실화
 - 정부의 초·중학교 과정 완전 의무교육 실시 선언 이후에도 의무교육이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초·중학교는 수업료 이외에도 학교 급식비, 체험활동비, 물품비 등 일체를 지원함
 -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 지역 간, 계층 간 교육차별과 교육양극화 심화의 방지 및 스펙 중심의 입시제도를 막기 위해 기회균등 선발을 20% 수준으로 확대 하여 지역균형선발, 계층균형선발을 강화하고, 내신 상위 10% 학생에게 해당 시도 국·공립고, 국·공립대 무시험 진학 기회를 보장함
 -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 우리나라 각 가정에서 부담하는 대학등록금 비중이 OECD회원국 최고 수준으로 국공립대부터 우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함
 - 진로·진학·취업 종합포털“Life Mentor Studio” 구축 : 청소년기 진로모색과 향후 직업 선택은 청소년들의 교육방향 및 인생설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나, 청소년들의 진로와 직업선택에 대한 상담 및 지도인력이 부족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Life Mentor Studio”를 구축하여, 직업별 현황, 학습체계, 훈련기관, 관련 대학, 채용기관, 준비방법 등에 대한 종합적 정보를 제공.

-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창의 기반형 학교가 필요하나, 민간 대안학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임. 공립형 창의학교를 도입하고, 사교육 형태의 대안학교체계를 공교육으로 흡수하여 초·중·고 공립 대안학교를 17개 시·도별로 시범도입하여 운영하고, 자체 교육과정 개발 허용하고 일정한 평가 기준에 따라 예산을 지원함.

- 학교폭력·따돌림 방지 : 학교 내 폭력 및 따돌림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피해자와 가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심각한 심리적 부담을 야기하고, 학습 분위기 저해와 교사들의 의욕 상실의 원인이 되고 있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교에 전문 심리상담사를 배치함

- 학교 중심 지역공동체 복원 : 방과후 교장제 도입 및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해, 학교시설을 지역공동체 활동을 위해 확대 개방하고, 학교 내에 구역별 평생교육 및 문화센터 설치, 학습동아리·강사양성·재능나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함. 이를 통해 청소년, 중장년, 노년층이 어우러지는 복합사회활동 공간 확보와 지역공동체 복원을 도모함

-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도입 : 초등학교 교원의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어, 여교사 편중이 높아지고 있음. 교원 배시 치 학교별남녀교사 최지 성비를 30%로 규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균형잡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함

- 재원조달방안 등

- 매년 5천억원의 재원을 세출조정으로 조달함.

2. 분석

- 정책 공약의 가치

- 국민의당이 제시하고 있는 공약은 크게 대입전형의 단순화, 의무교육의 내실화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는 교육계 전반에 걸친 이슈를 의무교육 내실화 속에 녹여넣은 구조로 파악됨
- ※세부공약으로 기회균등선발제 확대, 국공립대학교 등록금 4년간 동결, 진로진학취업 종합포털 구축, 창의융합형 자율교육 도입, 학교폭력 따돌림방지, 학교중

정의당

- 심 지역공동체 복원, 교원임용 성평등 할당제 도입을 제시함
- 국민의당은 타 정당에 비해 주로 학교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공약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 최근 공교육의 붕괴현상을 고려하여 볼 때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약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대입전형의 단순화를 통해 수시전형을 20%이하로 제한하겠다는 공약은 이 제도가 가진 부작용을 고려한다하더라도 다양한 재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수시전형의 전면적 축소를 예고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나. 정책 공약의 목표

- 정책공약의 목표는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으나 넓은 범위의 정책을 단순화하여 제시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공약별로 달성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공약들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대입전형의 단순화, 국립대학 등록금 4년간 동결 등)

□ 정책 공약의 수단

- 제시한 공약에 대한 재정적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새누리당 및 더불어민주당과 유사하게 증세에 대한 고려는 없으며 세출조정으로 충당하기로 한다고 적시되어 있음. 그러나 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재원조달 혹은 예산의 배분조정은 필수적이어서 이에 대한 고려가 보완될 필요가 있음
- 목표의 제시에 비해 수단의 구체성은 떨어지며, 시간계획은 4년간으로 제시되어 명확하지 않음

□ 정책 공약의 성과

- 효율성(비용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는 제시된 공약 수준에서는 발견할 수 없음
- 교육계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차별적인 수요를 고민하여 세부 공약을 개발한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음
- 또한 공약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상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정책 수단등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성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음

1. 정당의 정책 소개

□ 내용

- 어린이집, 유치원 누리과정 100% 국가책임제
- 초등학교 2배 확대, 고교 무상교육 도입, 대학균형발전
- 이행기간 :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 발의 및 개정 추진
- 재원조달 방안 : 조세개혁방안으로 복지증세

2. 분석

□ 정책 공약의 가치

- 정의당은 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가치에 충실하여 공약을 개발하였으며, 제시한 공약에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 정의당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부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완전 무상교육 및 대학균형발전 등)는 완전하지 않음

□ 정책 공약의 목표

- 누리과정 및 의무교육 관련 공약은 주로 현정부의 공약파기(누리과정의 중앙정부 부담)에 대한 반대 논리로 제시된 것으로 누리과정 중앙정부 100% 부담 등 목표가 매우 구체적임. 그러나 대학 균형 발전의 경우 목표 및 달성정도를 측정하기가 모호함
- 제시된 공약은 예산의 배분과 관련된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법체계상 모순되는 점은 없음. 그러나 정의당이 지향하는 가치에 대한 국민적 판단 또는 합의가 필요함

□ 정책 공약의 수단

- 질의서 답변을 통해 재정적 실현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앞의 3당과 달리 정의당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증세를 고려하고 있음)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누리과

정의 재원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중앙사무, 지방사무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며, 현재 중앙정부의 강경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법체계와 정치적 측면에서 실현가능성인데, 정의당이 지향하는 거의 전면적 무상교육과 대학 균형발전에 대한 가치를 국민들로부터 동의의 받아야 하는 전제가 있음.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 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정책 공약의 성과

- 정의당의 공약이 실현되었을 때의 효과성은 매우 분명할 가능성이 높음. 그러나 효율성의 측면에서 국가 제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명확한 해법이 필요함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총평

- 공통사항
 - 정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들의 교육분야 공약에서 재원조달 등에 대해 증세를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규모 세출조정을 동반한다는 의미인데, 이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전혀 제시하지 않음. 또한 4개 정당 모두 제시한 공약의 시간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아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교육 공약은 집권여당의 공약답게 행정부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명확성은 높은 편이나 현재 교육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중복성이 높음. 또한 제시된 공약들의 구체성은 높으나 바람직한 거시적 미래상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시된 것은 아님. 주로 현안에 대한 해결책 수준이어서 근본적 해결책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해법을 시간계획에 따라 제안하는 보완책이 필요함
- 더불어민주당
 -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 지향하는 가치는 '계층간 교육기회 격차 완화'로 명확한 편임. 그러나 공약이 단일하게 제시되어 있어 교육 분야에 대한 고민이 매우 부

족하게 보임. 아울러 전체 교육정책에 대한 거시적 체계와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서 공약을 평가할 근거가 빈약한 상황임. 선거에 임할 때마다 수권정당을 목표로 하는 정당으로서 교육분야에 대한 대폭적인 정책 역량 강화가 필요함

○ 국민의 당

- 국민의당은 타 정당에 비해 주로 학교기능의 정상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방향성은 공약에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음. 최근 공교육의 붕괴 현상을 고려하여 불 때 국민의당이 제시한 공약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넓은 범위의 정책을 단순화하여 제시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공약별로 달성여부를 판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일부 공약들은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아울러 공약의 실현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이상적인 정책 목표를 제시하였으나 정책 수단 등을 구체화하여 실현 가능성을 대폭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정의당

- 정의당은 주로 무상교육과 대학의 균형발전이라는 두가지 가치에 충실하여 공약을 개발하였으며, 제시한 공약에 비교적 명확하게 반영되어 있음. 그러나 정의당이 지향하는 미래상과 부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완전 무상교육 및 대학균형발전 등)는 완전하지 않음. 더구나 누리과정의 재원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중앙사무, 지방사무에 대한 법적 판단도 필요하며, 현재 중앙정부의 강경한 입장 등을 고려할 때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 또는 실현가능성을 고려할 때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이슈 IV-2]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사용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정책공약의 개요

- 선거정보포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10대 정책(30개 상세 실천과제)을 검토한 결과, 환경 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 다만 한국정책학회의 정책질의서에서 원전의 신규 건설과 운영을 안전 최우선의 원칙하에 추진하며, 사용후핵연료 처리를 위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정부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한 권고안'을 기초로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원자력진흥위에서 심의 확정할 계획이며, 2014년 현재 3.6% 수준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25년 7.7%, 2035년 11%로 확대할 계획임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수용하여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 충돌할 경우 개발을 우선시함. 이러한 기초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새누리당의 기타 공약과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원전의 대안 부재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되, 원전의 신규 건설과 운영시 안전 최우선의 원칙하에 추진할 것을 제시함

□ 정책공약의 목표

- 신재생에너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폐자원에너지¹⁾를 2014년 1차에너지 대비

1) 폐기물 에너지와 바이오 에너지중 바이오가스와 메립가스를 이용해 생산한 총에너지치를 총칭

2.9%에서 2020년까지 5.1% 달성할 계획이며, 향후 5년간('16~'20) 총 984억 원을 투자하여 기술 국산화율을 45%에서 65%까지 높이고,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확충으로 '14년 230만 톤의 가용 폐자원을 '20년까지 560만 톤으로 확대하며, 고품연료제품·소각열 등 유용 폐자원의 안정적인 수요를 발굴하고 폐자원의 수거·처리를 광역화하는 등 시설운영의 효율성도 제고할 계획임

- 다만 공약이 산업부, 환경부의 관련 기본 계획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독창성이 미흡하며, 구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측정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님

□ 정책공약의 수단

- 정책공약 달성을 위해 정부가 현재 시행중인 제원, 법체계, 추진 방법, 시간계획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함
 - 여당으로서 현 정부의 정책과 함께 추진됨에 따라 타 정당에 비해 실현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다만 현재 제시된 수단의 적정성(재정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추상적임

□ 정책공약의 성과 내지 기대효과

- 정책공약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와 국민의 차별적 수요 반영 등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나, 세부 정책 공약의 달성을 통해 발생할 효과(경제적 효과 강조)를 제시하고 있음
 - 다만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야당 협조로 인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등 첨예한 이슈 대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선거정보포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대 정책을 검토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분야 공약을 제시하지 않음

- 다만 한국정책학회의 정책질의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탈원전 에너지 기조로 전환하고(탈 원전 3원칙과 가능한 한 조기에 원전 제로),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권고안(15.6.29)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충분한 논의를 실시하며, 203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확대할 계획임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수용하여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 충돌할 경우 환경보존을 일부 우선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는 '정의, 통합, 번영, 평화'를 시대적 가치를 설정하고 중도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기타 공약과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탈원전으로의 에너지 기조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정책공약의 목표

- 정책공약 목표가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로 구체성이 미흡한 편이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측정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하위정책이나 법, 제도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움
 -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를 제외하고, 태양광, 풍력, 바이오, 태양열, 연료전지 등의 보급 확대,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 현재 운영되는 RPS(공급의무화제도)를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병행 추진 등을 제시함

□ 정책공약의 수단

- 정책공약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 시간계획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수단의 적정성(재정 확보 대책 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그리고 정책공약의 목표에 이어 수단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미흡하여 실현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구체적으로 정책공약의 수단으로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사회적 공문화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완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약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시간계획성 등이 미흡함. 그 외의 정책공약은 여소야대를 실현하여 추진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음

□ 정책공약의 성과 내지 기대효과

- 정책공약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와 국민의 차별적 수요 반영 등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며, 세부 정책 공약의 달성성을 통해 발생할 효과도 추상적으로만 제시함
 - 구체적으로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관련 정책공약의 성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원전의존도 축소 및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등 첨예한 이슈 대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정책공약의 개요

- 국민의당이 제시한 10대 정책 중 “정책순위 10 안전/먹거리, 물, 환경의 총체적 안전을 위하여”에 환경 관련 정책이 포함됨. 그리고 동 정책의 10개 이행방법 중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에 대한 정책공약은 제시하지 않음
- 다만 한국정책학회의 정책질의서에서 중장기적으로 탈원전 에너지 기조를 취하고 있고, 사용후핵연료처리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논의를 추진하며,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35년까지 20%로 확대할 계획임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 개념을 수용하여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의 조화를 추구하는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나,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 충돌할 경우 환경보존을 일부 우선시하고 있음. 이러한 기조는 성찰적 진보와 합리적 보수의 융합을 표방하는 국민의당의 기타 공약과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중장기적으로 탈원전으로의 에너지 기조 전환을 분명히 하고 있음

□ 정책공약의 목표

- 정책공약 목표는 방향성을 제시한 정도로 구체성이 미흡한 편이며, 이에 따라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측정가능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상/하위정책이나 법, 제도와와의 정합성에 대해서도 판단하기 어려움
- 구체적으로 2035년까지 에너지 공급 중 신재생에너지 비율 20%까지 확대를 제외하고, 신재생에너지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대폭 강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현재 운영되는 RPS(공급의무화제도)를 FIT(발전차액지원제도)와 병행 추진 등을 제시함

□ 정책공약의 수단

- 정책공약 달성을 위한 추진 방법, 시간계획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수단의 적정성(재정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그리고 정책공약의 목표에 이어 수단의 구체성과 체계성이 미흡하여 실현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정책공약의 수단으로 에너지특별회계와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 사회적 공론화 및 국민적 합의 도출 노력 등을 거쳐 20대 국회에서 관련 입법 완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약 수행을 위한 재원조달방안, 시간계획성 등이 미흡함

□ 정책공약의 성과 내지 기대효과

- 정책공약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와 국민의 차별적 수요 반영 등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며, 세부 정책 공약의 달성성을 통해 발생할 효과도 추상적으로만 제시함.
- 예를 들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관련 정책공약의 성과로 신재생에너지 육성을 통한 원전의존도 축소 및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을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등 첨예한 이슈 대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정책공약의 개요

- 정의당이 제시한 10대 정책 중 “정책순위 7 한국탈핵2040과 국토환경 보존, 생명존중 안전사회”에 환경 관련 정책이 포함됨. 그리고 동 정책의 3개 이행방법 중 2040년까지 원전의 점진적 축소를 통한 한국탈핵 실현 이행방법이 관련 있음

- 그리고 한국정책학회의 정책질의서에서 2040년 탈핵 실현, 사용후핵연료 직접 처분(고준위핵폐기물 처리방안은 사용후핵연료 총량 결정 이후 진행), 2030년 10-20%, 2040년 20-40%로 신재생에너지 비율 확대를 제시함

2. 분석

□ 정책공약의 가치

-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이 충돌할 경우 환경보존을 우선시하는 환경정책을 제시하고 있음. 정책공약이 환경 파괴의 방지 및 보존,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진보정당을 표방하는 정의당의 타 공약과도 정합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예를 들어 2040년 탈핵 실현을 분명히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수요측면에서 환경부가 2015년 수행한 「환경·기후변화를 고려한 에너지정책 대안 연구: 제3분과(전력)」 부문에서 제시한 독일 및 OECD 2℃ 기후대응 수요추세를 벤치마킹한 목표추종형 전력수요관리를 실시하고, 공급측면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확대하며 전환의 다리로서 LNG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고,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정부에서 검토 중인 발전총량제를 적용하여 LNG의 발전비중을 보장하고자 함

□ 정책공약의 목표

- 제19대 국회에서 소속 의원이 소규모 태양광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 제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음. 소규모 태양광의 경우 FIT를 부활하더라도 소요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여유자금의 20%에 불과하며, 2016년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여유자금은 1조6582억 원에 달함. 또한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원자력과 석탄화력 관련 지원금을 퇴출하고 재생에너지지원금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더욱 많은 지원이 가능함. 특히 제19대 국회기간동안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가 실시되었고 의무할당제에 대한 평가가 충분하며,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고 있어서 정치적으로 반드시 실현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다만 정책전원으로서의 재생에너지 확대목표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함

- 다만 20대 국회 임기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여 구체성이 일부 미흡한 편임. 그리고 제시되어 있는 정책목표도 매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의 측정가능성은 제시되지 않음. 예를 들어 2040년 탈핵에너지화를 위해 20대 국회 임기내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함

□ 정책공약의 수단

- 정책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법체계, 추진 방법, 시간계획 등의 정책수단을 제시하고 있으나, 현재 제시된 수단의 적정성(재정 확보 대책 등)에 대해서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그리고 국민여론을 모아 정부와 기업을 실효함으로써 실현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는 공약들의 실현가능성도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특히 제시한 공약정책 내용이 산업부와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민간과 상충 가능성이 높아 실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조정은 정부의 에너지정책을 통해 실시되므로, 2차 에너지기본계획(수립기간 5년)과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수립기간 5년)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함. 그러나 이미 수립된 계획에 대한 수정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2016년부터 시작되는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신재생에너지 확대목표를 반영시키고자 함.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소규모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차액지원제도 제도입, 인입비용 지원, 국공유재산 임대 시 임대료를 발전량 기준으로 적용하는 내용은 20대 국회 상반기에 발의함. 그 외에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정도 2017년 상반기까지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실현토록 함. 또한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2016년 이내 결정하기 때문에 2016년 국정감사를 문제점을 개선토록 함

□ 정책공약의 성과 내지 기대효과

- 정책공약이 비용 대비 효과에 대한 고려와 국민의 차별적 수요 반영 등이 이루어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아 판단할 수 없으며, 세부 정책 공약의 달성성을 통해 발생할 효과를 제시하고 있으나 추상적임
- 다만 환경 분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인해 정책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신규 건설 등 참여한 이슈대립이 이루어짐에 따라 문제해결에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총평

- 각 정당의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관련 공약에 대한 분석 결과, 원자력발전의 경우 새누리당은 안전에 기반한 원전의 현행 유지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가능한 조기 폐지를, 정의당은 2040년 탈핵을 제시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사용의 경우 그 비중의 목표에 차이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확대할 것을 제시함. 다만 정의당을 제외한 3당은 동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고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의지보다는 득표를 위한 공약의 나열 수준임²⁾
- 새누리당은 정책공약의 독창성 결여(산업부, 환경부 정책을 보완하는 수준의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선언적 수준의 정책공약 등으로 인해 대안 제시가 미흡한 수준임. 이에 반해 정의당은 상대적으로 다른 정당과의 차별성이 부각되는 정책공약을 일부 제시하고 있으나, 실현가능성과 성과에 대해 의문이 있음

□ 종합

- 정의당을 제외하면 원자력발전과 신재생에너지의 사용 관련 공약에 대한 각 정당 정책의 구체성이 미흡하며, 정책우선순위에서 하위이거나 구색맞추기 정책으로 제시되고 있음. 즉 국민의 의식수준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체계적인 전략 하에 실현가능성이 높은 구체적 대안의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철학적, 정책적으로 빈곤한 분야로 판단됨

2)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2015년 12월 분당을 함에 따라 유사성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환경 분야 정책공약이 각 당의 10대 정책공약에 포함 여부와 세부 정책공약의 수단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 제시된 정책의 가치, 목표 등 대부분의 내용이 유사함

V 사회/복지

[이슈 V-1] 저출산 대책

- 알하는 여성 자원 경력단절여성 자원 일·가정 양립방안, 다문화 가정 지원 등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새누리당은 저출산대책의 실효성이 없다는 기초 하에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여성이 일할 수 있는 기회 확대를 제시함.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가족친화인증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한 인증기업 확산 및 내실화, 다양한 근무유형 조성 등 제안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경력개발형 새일센터 확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부처 인프라 연계, 경력단절여성의 재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서비스를 제안
- ‘다문화가족’의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사회성 발달 등의 서비스에 중점을 둔 정책 제안
- 독일의 ‘마더센터’를 표방한 한국식 마더센터 설립 제안
 - “독일의 마더센터를 모델로 한국식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마련해서 앞으로 10년 후에는 은행 수만큼 마더센터를 만들고, 보험설계사 수만큼 엄마 도우미를 양성하겠다”, “마더센터 도입으로 더 많은 여성이 일과 가정이 균형잡힌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마더센터는 모든 예비엄마와 엄마들을 위한 미래형 보육 플랫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에 분산된 출산·보육·돌봄 서비스를 통합하고 큐레이팅해 부모에게 원스톱 일대일로 제공할 것”, “마더센터는 임신·출산·보육·입학까지 엄마들의 경험을 나누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열린 카페로, 은행같은 금융기관, 대형마트·백화점 같은 유통기업 등 부모의 접근이 쉬운 기업과의 민관협력을 통해서 구축될 것”이라고 제시.

2. 분석

가치

- 우리나라가 초저출산국가이면서 동시에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비율이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임을 인식한 결과로 여성이 경력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확대라는 두 가지 방향성에 맞춰 공약을 제시함을 밝힘. 저출산의 한 원인이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이라는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의 방향은 적절하며,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매우 높음을 고려할 때 재취업 지원의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목표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공약의 경우 가족친화인증지원체계 개선으로 구체화되고 있는데, 201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가족친화인증기업 목표치를 다음과 같이 제시함.
 -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목표(2015년 기준 1,363개)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1,800개	2,000개	2,200개	2,400개	2,500개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공약의 경우 30대 경력단절 여성 등의 새일센터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직종 훈련 확대 및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는 목표 및 취업인원을 2019년까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향후 4년간 300억 원을 추가 투입하여 새일센터를 통해 취업하는 여성 2015년 기준 연 14만 명에서 2019년 연 18만 명 달성을 목표로 제시

수단

-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확산’ 공약의 수단은 첫째, 가족친화인증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인증기업 확산 및 내실화를 위하여 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유도 및 독려, 인증기업·기관 대상 사후컨설팅, 공공기관의 선도적 실천 유도를 위한 인증 의무화 등으로 제시되고 있으며, 둘째, 여성의 경력 지속성을 보장해주는 유연한 근무환경 조성으로서 워킹맘이 일을 그만두거나 휴직을 하지 않아도 경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저축휴가제, 단축근로제, 시간선택형 근무제 등을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음.

- 가족친화인증 기업 확대 분야는 4년간 총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 예상
- 이외에 이상의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6년 기준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한 시간선택제 확산(462억),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지원(32억)으로 예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확대’ 공약은 경력개발형 세일센터 확대, 고부가가치직종 여성전문인력 양성 확대 운영, 경력단절여성 채용 수요가 많은 주요 산업별 협회와 네트워킹 등을 통해 좋은 일자리 발굴 강화, 창조경제혁신센터 등 관련 부처 인프라와 연계하여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강화, 취업여성의 재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온-오프라인 연계 사후관리 서비스 및 상담서비스 신규 제공으로 제시되고 있음.

-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확대 사업에는 4년간 300억 정도 추가 소요 예상

○ 한편,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다재다능)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와 부모 대상 자아정체성, 사회성 발달 및 미래설계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건가·다가 통합서비스 운영기관에서 시행될 예정

○ 이상의 예산은 과도한 재정부담을 주는 사업은 아니며, 기존 사업의 정비와 함께 단계적으로 사업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므로 예산 확보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독일의 ‘마더센터’를 표방한 한국식 마더센터 설립 공약의 경우 구체적인 예산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음.

○ 새누리당의 복지예산에 대한 기본 입장

-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 재정도 자연스럽게 확충되고, 복지지출 소요 증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며,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입장임.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3년간 상기의 정책수단이 상당 부분 시행되었기에, 추가적인 재원 마련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음.
- 또한 지난번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 총선에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복지재원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음에 따라, 그 규모 추산이나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은 제시한 10대 공약에 대한 총 소요예산을 4년간 (2017~2020년) 4.3조원

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소요재원을 흡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서 따른 연평균 예산증가 규모가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하여, 그의 약 10%인 1.1조원을 매년 활용하여 10대 공약에 대한 예산소요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음.

□ 성과

- 새누리당의 공약은 여당으로서 당정협의를 거쳐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효율성 측면에서는 무리는 없어 보임. 그러나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 조성사업의 경우 남성 참여 제고 및 중소기업 대상 사업이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등의 정책대응성 강화 노력이 필요함.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개괄

- 더불어민주당은 새누리당 대표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족 유입 등 국내 이민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 비판한 바 있으며, 당의 전국여성위원회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책임에 따라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 절실하다”면서 “더불어 청년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신혼부부의 주거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과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또한 “출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생아와 산모의 안전을 강화하는 의료지원, 차별 없는 여성 노동환경 조성 등 국가 책임 보육을 실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음.

□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를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제시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 해소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과 ‘생활임금제 확산’으로 임금 격차 해소
- 임신, 출산 등에 의한 불이익 등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근로감독 및 차별시정 강화
-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처벌 강화
- 가사근로자(가사·간병서비스 종사자)에게 최저임금 보장 및 고용보험 적용

- 경력단절여성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확대(2019년까지 200개) 및 기능 확충
- 창업여성에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 지원 확대
- 여성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 개선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30일 이내 20일 유급휴가)
- 육아휴직 급여 인상 - 월 통상임금의 10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
- '취학자녀돌봄휴가제' 도입(3개월 유급휴가)
- '칼퇴근법'으로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 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고용보험적용 사각지대 해소 통해 정규직 근로자 중심의 일·가족 양립 정책 개선
-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 이행 촉구
- 촘촘한 방과후 돌봄체계 구축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및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

- 한부모·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지원 강화
- 「가족지원기본법」 마련, 다양한 형태의 가족에 대한 차별 예방 및 지원

2. 분석

가치

- 저출산과 경제불황의 해법이 실질적 '성평등' 실현에 있음을 제시하면서 더불어 일하고, 더불어 돌보고, 더불어 지키고, 더불어 나누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가치 하에 공약을 제시함을 밝히고 있음. 저출산의 한 원인이 일·가정 병행의 어려움이고, 경제의 성평등 제고가 중요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방향은 적절하다고 판단됨.

목표

- 공약의 목표가 실질적 성평등사회 구현, 차별 없는 여성일자리, 일·가족·생활 균형 실현, 다양한 가족 지원 확대임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목표 제시가 없

으며, 공약의 측정가능성 등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수단

- 당 전체의 총선공약 재원대책으로만 제시되어 있으며, 세부공약별 재원 마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확대 등만이 제시되어 있을 뿐 확충의 근거 등에 대한 제시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또한, 현재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비율이 40%대에 달함을 고려할 때 육아휴직급여의 무조건적인 인상은 당초의 정책목표를 흐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육아기간 근무시간 단축제 등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 또한 '취학자녀돌봄휴가제'의 경우 이미 육아휴직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음. 보육 측면에도 경제활동 중심 보육지원체계 마련 등이 간과되어 있음.

더불어민주당의 복지예산에 대한 기본 입장

-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다수의 복지공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소요도 상당한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음.
-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임.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 개혁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또한 세입면에서 과거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014년 17.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의 19.6% 수준으로 2% 정도 올리면, 연간 약 3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앞서 말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기금을 출연하여 보육시설 확충 등에 투자하여 매년 국공립어린이집 560개를 신설한다는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재원이 필요없다고 밝히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정부담-적정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음. 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4대강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 2014년 17.8%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19.6%까지 정상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

을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갈등 완화, 소비활성화 및 경제성장 동력 제고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재원 마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제벌감세, 부자감세 철회 우선 시행 등 기존 감세되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높음. 공정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동의를 얻을 가능성도 큼.

□ 성과

- 양성평등한 사업 공약은 제시되어 있으나 세부 공약별로 확대만이 아니라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효율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음.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국민의 당은 새누리당 대표의 발언에 대하여 “문제에 대한 대안 제시가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청년층이 결혼을 해 아이들을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저출산대책“임을 밝힌 바 있음.
 - 경력여성 단절 재취업을 위한 센터 역할 강화
 - 경력단절여성 창업지원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확대 및 보장
 - 다문화가정 공동체적응 지원을 위한 다문화센터 지원 확대
 - 여성감정노동자에 대한 감정치유지원 확대
 - 산모전담 간호사제 도입
 - 5세 미만 아이와 동행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

2. 분석

□ 가치

- 특별히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공약으로 미루어 볼 때 일하는 여성 지원, 경력 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등이 정책의 방향으로 포함된 것으로 판단됨.

□ 목표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로서 인구 5천만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인구절벽을 해소하여 지속가능한 사회 유지임을 제시하고 있는 바, 측정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 못함.

□ 수단

- 공약 달성을 위하여 20대 국회에서 관련제도 도입을 위해 입법 활동에 주력하고, 향후 5년간 복지예산을 3% 증액하여 관련예산을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따라서 공약의 세부사업별로 재원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못함.
- 국민의 당의 복지예산에 대한 기본 입장
 - 국민의 당 역시 10대 공약 중 다수의 복지공약을 포함하고 있음. 다만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점은 추가 재원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임.
 - 기본적으로 국민의 당은 현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등 지출구조 합리화를 우선 추진하고, 조세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정상화, 누진세율 체계 확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 개별적인 정책공약에 대한 재정소요는 밝히고 있지 않지만, 국민의 당이 내세운 모든 공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총액 기준으로 연간 5천억원이 추가 소요되고,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 가능하다고 제시하고 있음.
 - 구체적인 증세 방안으로는 대기업집단기업 중 순익 1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 2%p 증액하여 연간 2조원 정도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또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등 지출구조 합리화와 조세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정상화를 2016~17년에 실시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누진세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퍼주기식 정책 보다는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 성과

- 세부 공약별로 확대만이 아니라 개선 등이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등 효율적 측면에 대한 고려가 충분하지 않음.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개괄

- 정의당은 그간 중앙여성위원회의 논평 등을 통해서 현 정부의 ‘맞벌이 지원정책’의 중요한 기제인 보육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고, “전업주부들의 전일제 어린이집 이용제한”을 문제점으로 제시한 바 있음.

□ 여성의 일자리 질 보장

- 돌봄노동자 및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 임금격차 해소에 차별없는 고용 보장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에 경력유지와 여성경력단절문제를 예방

2. 분석

□ 가치

- 성역할 변화와 가족 내 돌봄 책임의 양분, 기업의 참여가 동반되는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과 경력단절문제를 해소할 것을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음.

□ 목표

-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약의 목표로 다음을 제시하고 있으나, 측정가능성은 포함되어 있지 못함.

- 질 좋은 여성일자리의 보장
 - 돌봄노동자와 감정노동자의 처우 개선
 - 임금 격차 해소와 차별없는 고용의 보장
- 경력단절 여성의 예방과 지원 & 일·가정 양립방안
 - 임신부터 보육까지 국가책임제
 - 3대(임신, 육아, 돌봄) 휴가제 확대에 일·가정 양립 실현
- 다문화 가정 지원 확대
 - 생애주기별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강화
 - 다문화가족 및 이주민의 인권신장

□ 수단

- 정의당은 비교·분석 대상인 4개 정당 중 가장 폭넓고 깊이가 있는 복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재정소요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4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증세를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 구체적으로 재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음.
 - 세부공약은 정치적 결단과 법률의 제정 및 개정사항으로도 실현이 가능한 부분이 있고, 월평균 155만원 수준의 보육교사 인건비를 정부 지원금으로 단계별로 인상해 유치원 교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으며, 초과보육을 폐지하고 보조교사를 늘려 영유아 대 교사 비율을 낮출 계획임을 제시.
 -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국고를 지원해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을 돕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는 민간 시설 매입, 유휴교실 활용 등으로 비용을 줄여서 진행할 계획.
 - 출산전후 휴가확대 등의 재정 소요 등도 현 90일에서 120일로 확대 시, 고용보험에 가입한 출산 근로자에게 추가적으로 30일에 해당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액은 2015~2019년간 매년 1,229억~1,582억원, 5년간 총 7,184억원 수준으로 추계될 수 있으며 이는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사회 분위기를 점차적으로 형성하기 위한 최소 추계치로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부분임을 제시
 - 이외 비용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사회복지세 신설로 연간 40조원을 확보하여 그 중의 절반인 20조원 확보하여 지원 예정임을 제시

□ 성과

- 다른 정당에 비하여 관련 공약이 세부적으로 제시되고 있음. 보육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을 제시하면서 출산한 가정에 방문간호사제의 도입, 육아휴직에서 남편이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파파키퍼제 도입, 출산전후휴가의 120일 확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과 동시에 가족돌봄휴가제 신설 등 제도를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무차별적 방문간호사제도 도입 등은 과도한 지원이 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 등은 현재 육아휴직 후 복귀하지 않는 비율이 40%대에 달함을 고려할 때 당초의 정책목표를 흐리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육아기간 근무시간 단축제 등의 대안 제시가 필요함. 또한 보육 측면에도 경제활동 중심 보육지원체계 마련 등이 간과되어 있음.

총평: 각 정당의 정책공약 비교

□ 총평

- 전반적으로 국회의원 선거인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대통령 선거 수준의 공약의 세부화 및 구체화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모든 정당이 저출산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및 여성의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다만 공약의 목표의 내용 및 수단의 내용에서 차이점이 존재함.
-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우 국정과제 등으로 제시된 공약을 추진하면서 이미 당정 협의가 완료된 과제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공약의 수는 많지 않은 편이나 제시된 공약의 경우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이 높은 편임. 그러나 마더센터의 경우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측정가능성 및 재정적 실현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려움. 현재 제시된 수준의 정책을 새롭게 마더센터로 운영하기 보다는 기존 관련 센터나 사업의 수정을 통한 재편이 바람직할 수 있을 것임. 또한 공약 전체적으로 양성평등적 측면 및 중소기업 대상의 일·가정 양립 지원 측면에서 미흡함.
-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약의 수는 여당에 비해 많은 편이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 대표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이 제시되고 있는데 육아휴직 복귀율이 높지

않은 시점에서 유사한 지원제도인 근로시간단축제의 활성화 등 경력유지의 측면에서 고민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남성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은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확대보다는 내실화 측면에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 1주 52시간 이내 근로 법정화 등 공약이 일·가정 양립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의미
- 국민의 당의 경우에도 공약의 수는 여당에 비해 많은 편이나 구체성 및 측정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 정의당의 경우 다른 야당에 비해 관련 공약 마련에 노력한 점이 돋보이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과 여성의 경제활동 등을 연결하는 공약으로서는 미흡한 점이 있음. 또한, 측정가능성, 재정적 실현가능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

[이슈 V-2] 고령화 대책

- 저소득 독거노인 등을 위한 주거복지정책 등.

새누리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개괄

- 새누리당은 고령화대책으로 일자리와 건강, 주거문제 3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소위 맞춤형 공약 제시.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핵심적인 정책공약으로 하여, 노인복지청 신설 외에 노인 교육을 위한 33개소의 시니어행복센터 건립, 2만원으로의 노인 의료비 정액제 인상, 치매 노인 돌봄 전용 웨어러블 단말기 '안심팔찌' 제공,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노인친화기업인정제도 도입 등이 주요 공약.

□ 내용

- 우선 현재 15개 청에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노인정책을 일원화하여 전담할 노인복지청을 신설하는 안을 내세우면서 노인 복지와 일자리 문제, 사회 안전망 구축 등의 정책 총괄
- 현재 국가 지원 노인일자리가 38만 7000개이나 연간 10만 개씩 노인 일자리를 늘려서 4년 후에는 78만7천 개의 노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공익활동, 재능나눔형,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 도모. 특히, 취약노인 지원, 시설 안전관리, 노인상담 및 안내, 학습지도, 문화공연, 건강증진 예방 등의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재능나눔형 일자리의 현재 평균 6개월 활동기간을 9개월로 확대해 지속성과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 관련 법안의 제정도 추진예정
- 채용기업은 노인친화기업으로 지정, 공공기관 노인생산품 우선 구매 등을 권장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또한, 노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노인교육단체와 노인대학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
- 노인복지기관의 기능 확대 계획. 시니어행복센터를 16개 광역시도에 2곳씩, 세종시에 1곳, 총 33곳 건립하여 노인 복지, 재교육, 취업지원, 건강, 여가 서비스 등을 제공
- 노인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의료비 정액제 기준을 1만5천 원에서 2만 원

으로 단계적으로 인상

- 치매환자에게 위치시스템이 내장된 웨어러블 단말기인 '안심팔찌'를 제공, 치매 환자의 위치를 보호자들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치매 안심존 설정을 통해 치매 노인이 지정된 장소에서 벗어나면 보호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 지 계획.
- 노인 주거복지를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가 결합된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현재는 민간 기부금을 활용하여 16~17년 한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 재정을 활용하여 지속 공급. 연간 800호 수준의 공공실버주택 지속 공급

2. 분석

□ 가치

- 새누리당의 고령화대책이 추구하는 가치는 소위 생산적 노화라고 할 수 있음. 일할 수 있는 노인의 복지에 대한 강조. 일자리의 질적 수준보다는 계량적 증가에 대한 강조가 주요한 특징

□ 목표

- 노인의 일자리의 형태별로 재능기부(1만개)나 공익활동 (6만개), 그리고 민간분야 취업(3만개)의 비율을 제시하는 등 비교적 구체적인 수치를 제공하고 있음. 일자리 수를 활동별 기회수, 기간, 취업 교육 센터 수 등 측정가능하고 모니터링이 가능한 목표를 제시하였음. 상하위 목표와의 정합성에 있어서는 국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든다는 상위목표와 부합함. 그러나 이러한 양적증가가 실제로 노인복지의 수단으로 작동하려면 양질의 일자리로 이어져야 하나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음

□ 재정적 실현가능성

-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은 복지를 위한 증세를 지지하지 않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공약의 실현성에 대한 명확한 제시 결여.
- 예를 들어, 노인외래정액 구간 2만원인상은,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적절한 정책이나 복지부의 추산에 의하면 최소 1500억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하다고 함. 복지부는 지난해 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을 통해 노인외래정액제 구간별 다양한 개선방안을 이미 주문한 상태임. 또한, 노인의 사회관계 회복 및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비 절감, 가구소득 증가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 등을 기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기대의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음

-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지금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증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임.
- 경제가 활력을 되찾으면 재정도 자연스럽게 확충되고, 복지지출 소요 증가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따라서 경제활력 제고 노력과 아울러 4대 부문 구조개혁 완수 등을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것이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시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늘리는 증세는 최후의 수단이며, 기본적으로 경기활성화를 통한 세수 증대와 비과세·감면 정비,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고 입장임. 이는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주장했던 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박근혜 정부 3년간 상기의 정책수단이 상당 부분 시행되었기에, 추가적인 제원 마련 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음.
- 또한 지난번 대선과는 다르게 이번 총선에서는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복지재원에 대한 이슈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지 않음에 따라, 그 규모 추산이나 조달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예측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새누리당은 제시한 10대 공약에 대한 총 소요예산을 4년간 (2017~2020년) 4.3조 원이라고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들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정상적인 세입구조 내에서 소요재원을 흡수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정부의 중기재정지출 계획에서 따른 연평균 예산증가 규모가 약 10조원인 점을 감안하여, 그의 약 10%인 1.1조원을 매년 활용하여 10대 공약에 대한 예산소요를 충당하겠다는 입장이 나타나 있음.

□ 목표달성 효과성

- 노인 일자리 정책의 경우,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노인 일자리 지원 법 제정, 취업 교육 센터 개소 및 전담 기관 설치, 전담인력의 처우 개선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도 제시하고 있음. 기존 연구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 빈곤을 감소효과나 의료비 절감효과, 심리적 만족도와 사회적 관계에서의 긍정적 효과 등의 효과를 제시하고 있음³⁾ 그러나 이러한 일자리가 계량적 증가를 중심으로 하는 목표 설정에 치우치다 보니 취업을 원하는 노인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될 수 있을 지는 확실하지 않음. 공익부분의 일자리나 봉사활동의 성격을 가진 일자리의 경우 열악한 처우나 근무환경의 가능성.
- 전반적으로 노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 내실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저소득층 노인을 겨냥한 즉각적 대응을 위한 형식적 공약이 될 수 있음⁴⁾

3) 남기철, 한국 노인일자리사업의 현황과 쟁점,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671961>

4) 남기철.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개괄

- 핵심가치를 ‘노후 기본생활 보장 및 노인 자립지원 강화’로 제시하고 노인빈곤율을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기초생활보장대상 오인들에게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고령화 대책 및 노인 복지 분야의 핵심 공약 함.

□ 내용

- 기초연금 인상: 현재 10만~20만 원으로 차등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는 소위 노인 복지 공약을 10대 공약중 제 1 공약으로 제시. 일단 20만원으로 기초연금을 상향조정 한 후 2018년까지는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씩 지급.
-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기초연금액을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인 30만원 국민연금 A값의 10%→ 15%으로 인상.
- 현재의 정책대안에 비해 연간 6조4000억 원의 추가 재정 추가 예측. 재정 조달 방안으로는 현 제도의 대폭적인 개혁 제안. 세출면에서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전달체계의 개혁을 통한 예산 절감, 세입 면에서는 조세부담율을 적정화하여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적절한 세입 확보 등의 개혁을 포함하여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대개혁을 제안.

2. 분석

□ 가치

-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관한 이 공약을 더불어민주당 제 1공약으로 제시한 점이 주목할만함
- 더민주당의 복지부분 공약은 현재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는 제도의 강화 및 확대기조로 볼 수 있음.
- 더민주당의 고령화 대책에서의 핵심가치는 ‘노후 기본생활 보장 및 노인 자립

지원 강화'로 제시하고 그러한 가치의 실현방안으로 기초연금제도의 확대를 제안하고 궁극적으로 노인빈곤율을 중장기적으로 OECD 평균수준으로 완화하는 것을 겨냥.

□ 목표

- 현재 OECD 평균인 8.5%에 비해 한국의 노인복지 지출 수준은 GDP 대비 2.4%에 불과해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심각한 수준임. 지금부터 4년전 2012년 대선에서 기초 연금 20만 원이라는 공약이 제시되었으나 국민연금 수령, 부부 동반 수령여부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결과적으로 기초연금 20만원의 수령인구는 절반이 되지 않는 상황임. 즉, 기존의 공약은 현실적으로 실천되지 못하였으며 설사 공약대로 실천되어 저소득층 노인에게 월 20만 원의 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수준으로 노인 빈곤문제가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입장임.
- 기초연금액을 30만원을 제안한 근거는 최저생계비의 절반 수준으로서 최소한의 노후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원칙 하에 제시함.

□ 재정적 실현 가능성

- 더불어민주당은 10대 공약 중 다수의 복지공약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재정소요도 상당한 것으로 자체 추산하고 있음. 특히, 기초연금 30만원 제공으로 인해 현재의 제도 보다 연 약 6조 정도의 추가 소요를 예상하고 있음. 이러한 수치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는 일부 비난이 있으나 향후 국가경제의 성장 추세, 그리고 유럽 선진국의 사례를 볼 때 이러한 정도의 확장은 달성가능한 것으로 예측되기도 함.
- 추가적인 재정 소요에 대해 기본적으로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마련한다는 입장임. 우선 세출면에서 재정지출의 강력한 구조조정과 복지달체계의 개혁 등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는 자구노력과 재정지출 개혁을 시행한다는 계획임. 또한 세입면에서 과거 정부의 부자감세로 과도하게 낮아진 조세부담률을 적정화하며 왜곡된 조세체계를 정상화하여 세입을 확보함으로써 중산서민들의 부담은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임.
- 구체적인 재원조달 방안으로는 2014년 17.8%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 이전의 19.6% 수준으로 2% 정도 올리면, 연간 약 30조원에 가까운 추가 세입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여기에 앞서 말한 재정개혁과 복지개혁이 병행되면 적자국채 발행 없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하고 있음.
-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저부담-저복지 구조를 적정부담-적정복지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목표를 밝히고 있음. 부담의 적정화를 위해 재정지출 구조조정(4대

강 등 불요불급한 재정지출 축소), 2014년 17.8%인 조세부담률을 부자감세가 시작되기 이전 수준인 19.6%까지 정상화 등을 통해 복지재원을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달성 효과

- 이러한 복지재원 조달 방안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사회갈등 완화, 소비활성화 및 경제성장 동력 제고 등의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즉,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재원 마련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한 개별감세, 부자감세 철회 우선 시행 등 기존 감세되었던 부분을 정상화하는 것이므로 재정적 실현 가능성이 높음. 공정과세의 원칙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정치적 동의의 얻을 가능성도 보임.
- 더 민주당에서는 지금까지 조세 부담률의 증가폭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지만 있다면 재정적으로 조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측함. 더하여, 필요한 재원은 “재정개혁, 복지개혁, 조세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함. 이러한 개혁의 실현 가능성은 향후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 그 가능성이 파악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국민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개괄

- “노인 빈곤제로”를 목표로 “주머니가 든든한 노인”, “사랑받는 노인”, “삶이 편한 노인”이라는 3개 실천방안이라는 기초아래 1) 고령자 빈곤 제로 시대와 2)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 및 본인부담상한제 도입이라는 핵심 공약을 제시

□ 내용

- 저소득층 노인 소득보장
 - 노인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3% 증액
 -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 기초연금 감액을 폐지

-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 노인가구의 주거비, 광열비 등 지출비중이 높은 항목 지원을 확대
 - 노인 일자리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준고령자, 고령자 사회보험료 국가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 및 본인부담금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도입)
- 노인 일자리 2배 확대 및 수당확대·기간연장
 - 공익활동형 기준으로 노인 일자리를 2016년 29만 8천개에서 2020년까지 60만개로 단계적 확대
 - 노인 일자리 수당을 현행 20만원에서 2020년까지 4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
 - 노인 일자리 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
-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 노인 일자리 개발 및 지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 노인 취업지원, 창업지원, 일자리 선도 기업 지원
 - 노인생산품 인증,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 유도
-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 청년-노인 경험주고받기사업: 지역의 대학생과 고교생(실업계)이 강사가 되어 노인의 외국어, 컴퓨터, 식품과 영양, 안전과 건강관리 등 교육을 담당하게 하여 청년은 일자리 경력을, 노인은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함
- 홀몸 노인 경로당 쉼어 하우스
 - 전국 3만 6,000개 마을회관에 조리시설, 건강의료기, 잠자리 등을 마련해 공공 속으로 탈바꿈하고 적극적인 지원 프로그램 제공
-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 확대
 - 전국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동교실 보급, 영양, 식습관 등 건강교육, 운동프로그램 제공
-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 수퍼 고령지역(65세 이상 30% 초과) 20곳을 선정하여 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 교부
 -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종합 복지인프라 구축, 의료, 요양, 재가서비스 통합 제공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직영 요양시설 및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기반 공공 요양시설)을 확대

2. 분석

□ 가치

- 국민의 당 공약은 표제는 노인빈곤 제로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단순히 일

자리 창출이나 기초연금의 보장 확대 등 소득보장이나 노인활동의 증가와 같은 측면만이 아니라, 소득, 복지, 보건 및 운동 등의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선 및 확대방안을 통해 노인의 삶의 질을 전반적인 측면에서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노인정책은 단순히 저소득층만은 겨냥한 것이 아니라 대상 노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취지의 방안임

□ 목표

- 내용적으로 다양한 세부목표를 다루고 있으며 목표치는 새누리당보다 확대나 강화된 양상이나 결정적으로 저소득층 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다소 소극적으로 보임.
- 노인 빈곤의 제로화라는 목표는 명확하나 그러한 상위목표와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하위 목표간의 연계성이 좀더 명확하게 제시될 필요가 있음.
- 하위 목표들로 제시된 3가지 분야들은 구체적인 아이টে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로 그러한 아이টে들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음. 예를 들어,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현재의 제도를 수정한다고 하나, 어떠한 방식으로 수정이 될 수 있을지 분명치 않음. 마찬가지로 노인 일자리를 늘리고 수당을 높이는 방안은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의 현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양질의 일자리 생산 방안이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재정적 실현 가능성

- 기본적으로 국민의 당은 현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등 지출구조 합리화를 우선 추진하고, 조세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정상화, 누진세율 체계 확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복지재원을 마련한다는 입장임. 매우 다양한 분야의 정책대상 및 혜택을 제안하는 반면 그러한 재정적 달성방안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음.
- 국민의 당은 '어르신 빈곤 제로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의 실현을 위해, 기초연금법을 개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 38만명과 국민연금수급자 28만명에 대한 금액(8,600억원) 폐지를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외에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확대와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건강 100세 운동교실 전국 확대, 전국 20곳의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홀몸 어르신 경로당 쉼어 하우스 등의 세부 정책공약을 제시하고 있음.
- 국민의 당에서는 이와 같은 어르신 복지사업 공약의 이행을 위해서는 연간 1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예상하고 있는데, 이는 세출조정으로 조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

- 대기업집단기업 중 순익 100억 원 이상 기업에 대해 법인세 2%p 증액하여 연간 2조원 정도의 조세수입을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나 대기업에서 이러한 법인세의 증가를 환영하지 않는 데 이러한 저항에 대한 대응 필요.
- 또한 예산의 낭비요인 제거 등 지출구조 합리화와 조세감면 혜택 축소, 법인세 원상회복 및 실효세율 정상화를 2016~17년에 실시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누진세율체계를 확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 퍼 주기식 정책 보다는 실제 필요한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정책을 개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음.

정의당

1. 정당의 정책 소개

□ 개괄

- 소위 정의로운 복지로 “OECD 평균복지국가” 달성이라는 표제를 주축으로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국민 삶의 질을 보장할 수 있는 복지국가를 만든다”는 목표로 노인 복지 정책안을 제안. 특히, 부양의무제 폐지한다는 것이 다른 정당들의 노인 정책과의 가장 두드러진 차별점이며 공적연금 하나로 OECD 수준 노후소득 보장하는 것을 주장함.

□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제 폐지로 노인빈곤 해소
- 공적연금 하나로 OECD 평균 수준의 노후소득 보장
 - 국민연금 명목소득 대체율 50% 인상과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지원 확대, 출산/균복무 크레딧 등 확대
 - 기초연금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즉각 폐지, 기초연금 대상 및 급여 확대
- 은퇴자협동조합 등 사회경제공동체 지원 강화
- 노인 맞춤형 편의시설을 갖춘 공공실버임대아파트 확대 및 주거비 지원 2배 확대
 - 의료인과 복지사가 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여가·친교프로그램 도입
 - 반값임대주택 도입/ 저소득층 주거비 대상 2배 확대 및 월 11만원→20만원으로 인상
- 국공립 장기요양시설 확대 및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 노인 방문보건서비스 확대 및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건강보험 보장률 62%→80% 확대(입원진료비 90% 보장, 연간 100만원 상한제 도입)

- 허약 노인 대상의 보편 방문보건서비스 제공
-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노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 은퇴 후 소득 없이 3억원 집 한 채만 있어도 건강보험료 12만원 부과
 - 소득 없는 70대 노부부 월 13만5,030원 → 1만 6천원 미만 (또는 경감)

2. 분석

□ 가치

- 노인에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세대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고 세대간의 연대방안의 중요한 방안이자 사회적 논의의 주제로서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함. 이에 국민 전체의 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며 노동, 조세, 경제, 사회복지 등을 포괄한 ‘사회적 논의 구성’의 필요성을 핵심적인 가치로 제시함.

□ 목표

- 정의당에서는 노인 빈곤률 (49.6%로 OECD 국가 중 1위 (2013)), 현재의 부양의무제로 인해 117만명의 절대빈곤층이 수급대상에서 탈락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실질소득대체율이 2015년 24.2% → 2050년 20.4%로 하락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 2014년 기준 노인장기요양시설 중 국공립 비율은 1.4%에 불과하며 ▶ 2014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가구가 부담을 느끼는 지출 항목 1위는 주거관련비 35.4%이며, 2위는 보건의료비로 23.1%라는 자료에 근거하여 이러한 문제점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제시.
- 요람에서 무덤까지 이어지는 평생복지라는 상위정책과의 연계적인 차원에서 노인복지를 제시

□ 수단

- 공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법 개정과 복지증세를 들고 있음. 법 개정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연금법 개정, 기초연금법 개정, 주거기본법 개정, 장기요양보험법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등 관련 법 개정을 제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은 제시되고 있지 않음. 또한, 복지 증세에 관해 사회복지세 도입(연 20조원) 등 복지증세 50조원 방안 마련을 제안함.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재정중립성 원칙에 따라 부과체계 내에서 조정 가능한 것으로 제시.

□ 재정적 실현 가능성

- 정의당은 비교·분석 대상인 4개 정당 중 가장 폭넓고 깊이가 있는 복지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으며, 일부 재정소요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나, 4개 정당 중 가장 많은 재정 소요를 필요로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정의당은 사회복지세 도입으로 증세를 통해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음.
- 재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에 추가로 부가되는 세금으로(surtax) 사회복지세 신설로 연간 40조원을 확보하여 그 중의 절반인 20조원 확보하여 지원 예정임을 제시
- 복지 증세에 관해 다른 정당에 비해 구체적인 증액범위를 제시.
- 정의당 조세개혁[안] 세수 증감액 추계

	세목	주요 내용	세수 증감
증액 세목	사회복지세	소득세,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부세액에 10~20% 부과	20조원
	법인세	법인세 최고세율 25%	8조원
		사내유보금 10% 할증과세	3조원
	소득세	5-15-25-35-45% 세율 개편	3.4조원
		주식양도소득 누진세율 등	2조원
		월세소득 종합과세 등	3조원
	재산세 종부세	과세표준 누진세율 상향(4조원), 공시가격 실거래가 반영(4.5조)	8.5조원
	상속 증여세	공제 5억 제한 등 실효세율 강화	1.6조원
증여세재계산제, 세대생략 할증		추계 미정	
	증액 세수 합계	+49.5조원	
감액 세목	조세특례 제한법	생애최초 소득자 백만원 세액공제	추계 미정
		월세 세입자 주거비 세액공제 등	
		정규직 전환 기업 세액공제 확대	
	개별소비세법	중소형 승용차 개별소비세 폐지	-0.5조원
	감액 세수 합계	-0.5조원	